

2020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보고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제 출 문

서울시 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07.

- 연구수행기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 연구책임자 김윤철(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장, 교수)
- 공동연구원 우대식(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실천교육센터 연구원)
 김윤식(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
 정담희(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연구보고서 요약문	01
I. 연구 개요	07
1. 연구 추진 배경	07
2. 연구의 목적	08
3. 연구 방향과 방법	08
II. 서울시 서남권의 특징 및 현황	10
1. 서울시 서남권의 범위와 의미	10
2. 서울시 서남권의 주요 특징과 일반현황	11
III. 서울시 서남권 시민사회의 특징 및 현황	25
1. 서남권 시민사회의 주요 일반현황	25
2.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사와 흐름	31
3. 활동가가 바라본 서남권 시민사회의 특징과 서남권NPO지원센터 의 필요성	44
IV.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과 역할	54
1.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54
가. 서울시 권역 간 시민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서남권 공익활동의 거점 구성	
나. 권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 발굴과 논의 활성화 지원으로 서남권만의 비영리 공익활동의 모델 발굴	
다. 새로운 형태의 활동가와 다양한 형태의 NPO 공익활동의 증가에 따 른 다양한 시민사회 동력 발굴	

라. 서남권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권역 중간지원조직 으로서의 NPO지원센터	
마. 정부, 지자체의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촉진	
2.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	58
가. 서남권 시민사회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자원 연계	
나. 서남권 NPO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다. 서남권 NPO 특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및 공익활동 촉진	
3. 서남권NPO지원센터의 기능	62
가. 서남권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나. 서남권 NPO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다. 서남권 NPO 활동 기반 조성	
라. 서남권 특성화 사업	
V.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전략	66
1.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개요	66
2. 서남권NPO지원센터 세부 운영 전략	67
가. 서남권 NPO 네트워크 형성	
나. 서남권 NPO 역량 강화	
다. 서남권 NPO 기반 조성	
라. 서남권 특성화 사업	
3. 서남권NPO지원센터 일반적 입지조건	87
VI. 맺음말	89
- 참고문헌	91

연구보고서 요약문

본 연구는 서울시 서남권의 지역적,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징과 시민사회의 특징 및 현황조사를 통해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남권 시민사회 워킹그룹 대상의 설문조사와 서남권 3개 소권역별 FGI 및 서남권 워크숍을 토대로 서남권 시민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도출하며 그에 따른 세부운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함

1. 일반현황, 설문조사, FGI, 워크숍을 토대로 바라본 서남권 시민사회 주요 특징

- 서울시 서남권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총 7개의 자치구로 구성되며 약 163km²(서울시 면적의 26.9%) 면적에 317만 명(서울시 인구의 30.4%)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음
- 2030서울생활권계획에 기반한 5대 권역 중 가장 많은 7개 자치구가 속한 권역으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NPO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임
- 환경과 문화재 보호, 노동운동, 빈민운동에서 출발해 생활형 주민운동과 지역 기반의 시민사회 활동으로 이어지는 특성이 나타남.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 활성화 모델 발굴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임
- 1인 가구 및 청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과 동시에 1인 활동가, 생계와

활동을 이분화하여 활동하는 N잡러, 문화예술 활동 기반의 청년 활동가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익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활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지역임
- 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고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시민협력플랫폼 등의 정책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임

2.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 타당성

- 서울시 권역 간 시민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서남권 공익활동의 거점 조성
 - 서울시 5대 권역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이며, 7개 자치구가 소속된 권역으로 각 자치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이 필요함
 - 서남권은 자치구별 시민사회 생성과정과 역사가 상이하지만, 활동권에 따른 유사성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자치구별 특성에 기반한 소권역별 네트워크를 추진
 - 소권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비영리 의제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소권역별 장단점을 고려한 사업 연계와 협업으로 서남권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
- 권역,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 발굴과 논의 활성화 지원으로 서남권만의 비영리 공익활동의 모델 발굴
 - 서남권은 자치구별로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슈를 전통적 시민사회 활동방식으로 해결하면서 시민사회를 활성화 해왔음
 - 이러한 활동방식이 2010년 이후 생활형 주민운동과 지역 기반의 시민사회 활동으로 이어짐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제와 새로운 형태의 공익활동 모델 발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지역임

- 새로운 형태의 활동가와 다양한 형태의 NPO 공익활동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민사회 동력 발굴과 사회적 공익증대
 - 1인 활동가, 1인 단체, 생계와 활동을 이분화하여 활동하는 N잡러, 문화예술 활동 기반의 청년 활동가,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동 등을 통한 주민 모임 등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익활동 주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임
 -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을 비영리 영역과 연계해 권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서울시 전체의 사회적 공익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행 단위가 필요함

- 서남권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권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NPO지원센터 설치
 - 서남권 기초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 2019) 결과와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 시민사회는 활동가와 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 욕구가 높고, 자치구 간 네트워크 의지가 강함
 - 이에, 서울시 시민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각 자치구 시민사회와 활동가의 욕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과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은 서남권 시민사회가 새로운 활동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과 운영전략

- 서남권 시민사회 활동의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원연계 허브
 - 각 자치구 활동을 기반으로 서남1권(강서구, 양천구), 서남2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권(관악구, 동작구)으로 구분되는 소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남권 전체를 통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센터 구성
 - 중간지원조직,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 공익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권역 내 다양한 공익자원을 시민사회와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 수행

- 서남권 NPO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 서남권은 2010년 이후 NPO 단체들의 양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대다수를 임의단체가 차지하고 있음
 - 단체의 활동 기간을 고려한 맞춤형 단체역량강화와 활동가의 수준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 의제 발굴을 위한 활동가 자기 주도 역량 강화, 의제 개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활동가 독립연구 지원, 소진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활동력 보장 체계 마련

- 서남권 특성에 따른 NPO 활동 기반조성과 공익활동 촉진
 - 활동 기반을 위한 공유공간 마련, 지역 공동의제 발굴 등 권역 단위의 정책적 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의제 및 분야별로 자치구 내 NPO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활동 생태계 조성
 - NPO 활동이 자치구에 매몰되어 고립되지 않고 활동의 영향이 확산되고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역 공동의제 발굴과 연구 필요
 - 지역 특성에 기반한 홍보 및 아카이빙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플랫폼의 성격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확산 방안 마련

- 서남권 자치구 특성에 따른 공익활동 특성화
 - 자치구별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서남권NPO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특성화 전략을 제시
 - 서남권 NPO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 서남권 7개 자치구의 공통된 고민임. 특히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의 경우 잠재적 청년 활동가와 신규 활동가를 발굴할 가능성이 충분함
 - 주민 모임, 임의단체 등과 연계한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생활 중심형 활동과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이 결합한 임의단체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대학연계 공익활동: 시민사회에 특화된 성공회대, 대규모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이 서남권에 자리하고 있으

나 실질적인 연계 활동이 미비하므로 중간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원연결자 역할 수행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공익활동: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남권NPO지원센터 간 협업을 통해 정보교류, 자원연계 등 기초수준의 협력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4. 맺음말: 서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제언

- 7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권역 허브 거점 조성
 - 서남권의 경우 서울시의 5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자치구가 소속되어 있기에 권역 네트워크 구성 방안과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함.
 - 이에 자치구별, 소권역별 지원과 동시에 이를 연결하고 통합하는 네트워크 방식의 권역 허브 기능을 수행해야 함
- NPO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자원연계 협업 플랫폼 구축
 - 권역 내 정부 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사회공헌팀과의 자원연계가 필요
 - 권역 차원의 조사와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해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남권 NPO와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 수행
- 전문성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자율적 운영
 -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권역 내 NPO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센터와 센터활동가들은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 받으므로 자체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 서남권 특성에 따른 NPO 활동 모델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 서남권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활동가 및 신규활동가 발굴, 주민모임과 임의단체 등과 연계한 비영리스타업 발굴, 대학연계 공익활동,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공익활동을 중점전략으로 시행 제안

- 시민사회의 행정에 대한 협치 파트너 역할 수행과 권역 의제 발굴
 - 지역 내 여러 시민사회 주체들이 협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공동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I. 연구의 개요

1. 연구 추진 배경

- 가. 지역 시민사회 성장지원 및 서울시·자치구와 지역 시민사회의 협치 기반 강화 필요성 대두
-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NPO는 주민의 생활상의 문제해결을 넘어, 자치구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주체임
 - 또한, 서울시 민선 5기부터 추진된 협치 정책으로 인해, 행정과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지역 협치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았음
 -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는 정부나 광역의 의제를 다루는 단체에 비해 활동 환경이 열악함
 - 이에 지역 시민사회 성장을 위해 권역에 포함된 자치구 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권역 기반 공동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며, 타 영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협치의 주체로서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나. 서울시 시민사회 성장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개선
-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계획(2019년~2022년) 중 ‘사회적 가치와 공익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에 대한 정책 이행과 정책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설정
 - 세부 추진과제 중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해 단계적으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확대 계획 수립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별 필요도 조사 결과(서울시NPO지원센터, 2018)에 따르면 서울시 권역·자치구 NPO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시민사회 요구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다. 동북권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기반한 NPO 지원체계 전략 및 권역 센터 확대 전략 모색 필요
- 서울 권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시민사회 의제 해결력 향상 및 지역 시민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권역별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전략 필요
 - NPO 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동북1권, 서남권, 서북권 시민사회 기초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 2019) 결과 3개 권역 모두 권역NPO지원센터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장기적으로 광역·권역·자치구NPO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 및 권역·자치구 NPO지원센터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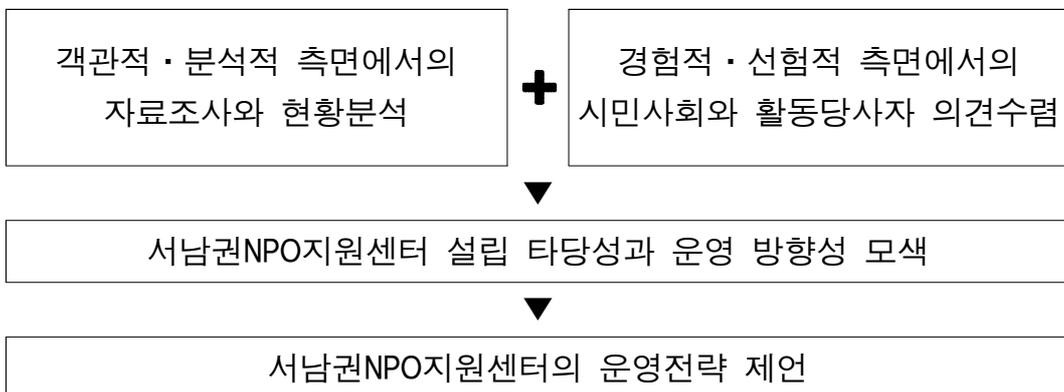
2. 연구의 목적

- 가. 서남권의 지역적,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징과 시민사회의 특징 및 현황조사
- 나.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과 운영 방향성 모색
- 다.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전략 제언

3. 연구 방향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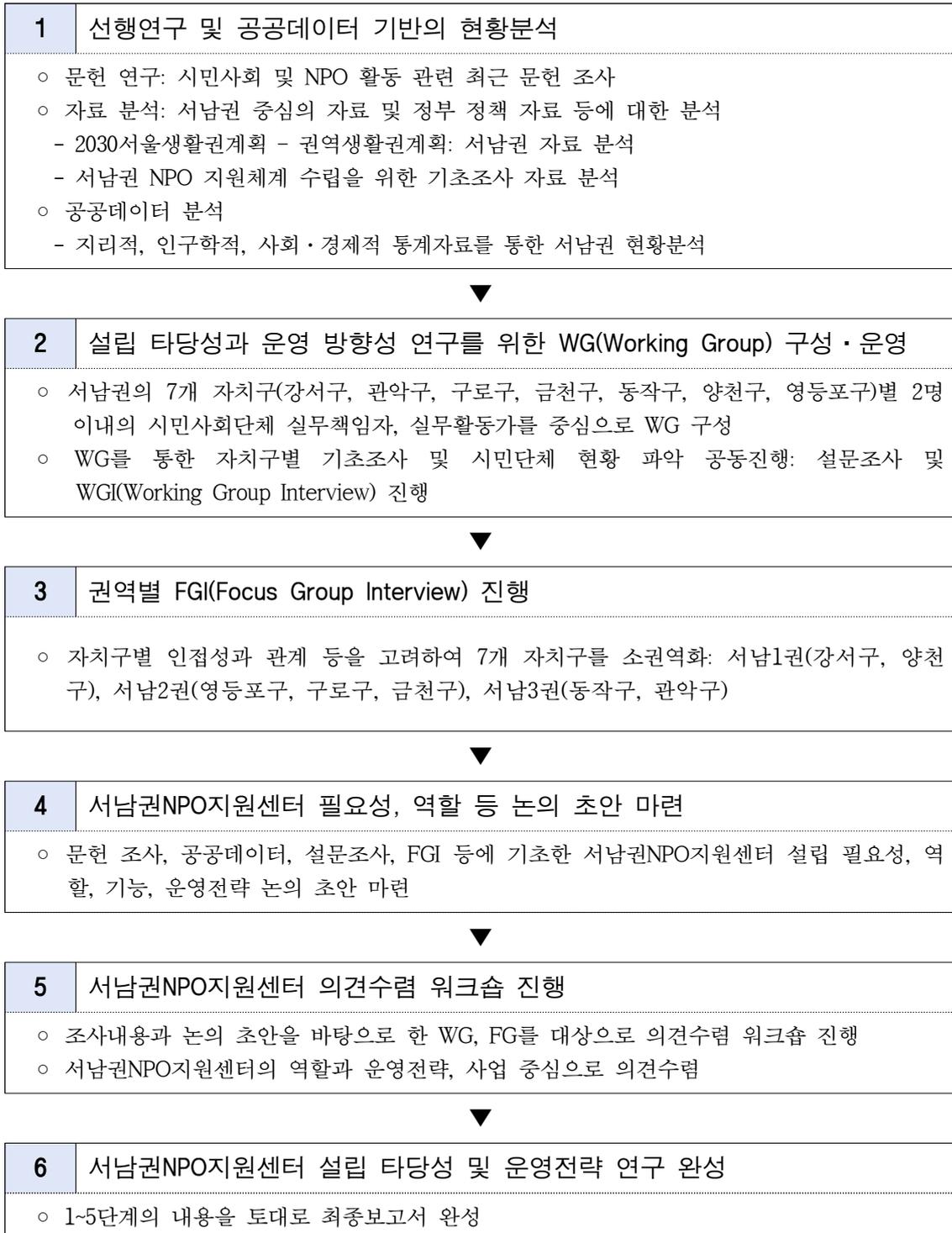
- 가. 연구조사 방향

<표 1> 연구조사 방향



나. 연구 방법 및 연구체계도

<표 2> 연구 방법 및 체계도



II. 서울시 서남권의 특징 및 현황

1. 서울시 서남권의 범위와 의미

가. 서울의 권역 구분

- 서울시는 2030서울플랜의 후속계획으로 생활권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권 발전 방향과 도시관리 구상을 제시하고 계획 내용 및 계획 범위에 따라 권역과 지역생활권계획으로 재구분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발표
- 생활권의 공간 범위는 지형, 지세, 하천, 도로 등의 자연적,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성장 과정과 영향권, 중심지 기능과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과 교육 학군, 주거지와 거주인구의 특성, 관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권역(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으로 설정함

나. 서남권의 범위

- 2030서울플랜의 공간계획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중심지체계와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기본방향과 이슈별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면 2030서울생활권계획은 서울플랜에서 제시된 공간계획과 핵심이슈별 계획을 생활권 단위로 종합화하고 구체화하여 제시함

<그림 1> 서남권 권역 자치구



자료: 한소하의 PPT 패스파인딩: 서울지도 무료 PPT 템플릿, 소하로그

- 생활권계획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 발전계획 및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근거를 제시
- 이에, 본 연구의 서남권의 범위는 2030서울생활권계획의 서남권 정의를 기본으로 함

2. 서울시 서남권의 주요 특징과 일반현황

가. 서남권 개요

- 서남권은 1960년대 영등포구의 단일 행정구에 속했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1970년대부터 분구를 거듭하여 오늘날의 7개 구로 재편되었음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총 7개의 자치구로 구성되며 약 163km²(서울시 면적의 26.9%) 면적에 317만 명(서울시 인구의 30.4%)의 시민이 생활하고 있음

나. 서남권 자치구 및 권역별 특징

- 자치구별 특징

<표 3> 서남권 자치구별 특징

자치구	특징
강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 41.43km²(서울시 면적의 6.85%), 인구 596,949명(서울시의 6.1%) · 김포공항이 위치한 수도 서울의 관문이자 부천·김포·일산·고양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광역교통의 요충지 · 녹지공간이 풍부한 자연 친화적 도시이자, 사람 중심의 교육·복지 도시 ·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항공운송업과 관련 파생사업이 밀집
양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 17.40km²(서울시 면적의 2.88%), 인구 464,185명(서울시의 4.8%) · 일등교육과 주민 중심의 문화가 갖추어진 평생학습 교육 문화 지역 · 아파트단지와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루어진 균형 발전지역 · 안양천과 도심 공원으로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 녹색 건강 도시 지역 · 목동은 방송회관, SBS, CBS 등 방송 및 언론 사업체가 다수 위치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은 24.53km²(서울시 면적의 4.05%), 인구 367,778명(서울시의 3.8%) ·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로 정치, 금융, 언론, 업무의 복합기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역 등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한국 최대의 공업지대인 경인공업지대의 핵심 · 특히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KBS, MBC, SBS, 동아일보사, 전화국 등의 공공 기관과 63빌딩, LG 빌딩, 전경련회관,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들이 들어서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서울의 맨해튼으로 불림 · 영등포동은 상업지구를 형성하여 서울 최대의 부도심
구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 20.12km²(서울시 면적의 3.32%), 인구 404,497명(서울시의 4.1%) ·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로써 60년대 한국수출산업공단 설립과 함께 발전을 거듭했으며 세계 최대규모의 기계공구상가 유통단지 위치 · 서해안 시대의 중심축인 김포공항, 인천항,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한 서울의 남서관문으로서 경부·경인선 철도와 전철 1·2·7호선, 경인·경수 국도가 연계하는 교통의 요충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530개 벤처 업체가 입주한 국내 벤처 집적시설 1호인 키콕스(KICOX)벤처타운의 입주를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대두
금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 13.02km²(서울시 면적의 2.15%), 인구 233,917명(서울시의 2.4%) ·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서울디지털산업 2·3단지가 입지(약 1,100여개 제조업체가 입주) · 공단 내에는 다수의 의류 상설 할인매장이 조성되어 이 지역을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류·모피 등 패션디자인 산업(2단지)과 지식·정보통신산업전문단지(3단지)로의 개발 추진 · 소규모 공장이 독산동 지역에 산재하여 있고 시흥3동에는 대규모로 조성된 시흥 산업용재 유통센터와 중앙철재상가가 위치해 산업 유통기지 역할
동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 16.35km²(서울시 면적의 2.7%), 인구 396,203명(서울시의 4.1%) · 국립서울현충원, 사육신역사공원이 위치한 호국충절의 고장 ·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역인 노량진역이 있으며, 서울의 동서남북을 연결해 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 · 중앙대·송실대·총신대 등 오랜 역사의 대학들과 노량진 일대의 각종 학원이 밀집해 있는 교육의 요람
관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면적 29.57km²(서울시 면적의 4.89%), 인구 501,957명(서울시의 5.1%) · 상가와 주택지의 시장을 제외하면 거의 전역이 주택지 · 구 중심부를 남부순환로와 지하철 2호선이 관통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이 있어 교육·문화·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 서남권의 청정주거도시로 각광 · 관악산과 낙성대는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

자료: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따르면 서남권은 다음과 같이 서남1권, 서남2권, 서남3권으로 구분됨

<표 4> 서남권 권역별 특징

구분	대상구	면적 (km ²)	특징
서남1권	강서, 양천	58.8	연립/다세대 아파트, 숙박시설 위주로 구성
서남2권	영등포, 구로, 금천	58.1	판매, 위락, 업무, 문화집회, 공장시설 위주로 구성
서남3권	동작, 관악	45.9	단독/다가구, 교육연구시설 위주로 구성

자료: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다. 서남권의 자치구별, 분야별 지역 현안

- 서울시 생활권계획 상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 현안 과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5> 서남권 지역 현안 과제 및 목표

자치구	지역 현안 과제 및 목표
강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곡 첨단도시 건설 본격 추진 · 노후 주거지 개량 및 주민참여형 재생
양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 생활 안전체감도 제고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복합타운 조성 · 준공업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구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 이전적지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 추진
금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천문화관광벨트 조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동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세권 중심 상업 기능 강화 · 도시환경 개선 위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도입
관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부순환로 서남권 중심지화 · 경전철(신림선) 신설

자료: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 서울시는 서남권의 7개 분야별 현황에 따라 서울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남권의 분야별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23개의 목표와 48개의 전략을 수립하였음

<표 6> 서남권 분야별 핵심이슈 및 목표

구분	분야별 핵심이슈 및 목표
도시공간	1. 서울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서남권 중심지의 전략적 육성 1) 서남권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공간구조구상 2) 글로벌 경제거점으로 영등포·여의도 도심의 위상 강화 3) 신성장산업과 일자리 기반의 광역중심(가산·대림, 마곡) 육성 4) 서남권 내 지역중심(목동, 봉천, 사당·이수)의 기능별 특화 및 연계 5) 서울대도시권을 연계하는 관문지역의 전략적 육성
산업·일자리	2. 신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재생을 통한 일자리 기반 구축 6) 서남권의 권역별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 7) 산업단지(G밸리, 마곡, 온수)의 위상 정립 및 재생 활성화 8) 전략적 성장거점 조성 및 기존 산업생태계 보호·육성
주거(정비)	3. 서남권의 주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9) 입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 관리 10)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지 특성 관리 11)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12) 개발·정비사업 유형에 따른 주거지 정비관리
교통	4. 간선교통기능 강화 및 대중교통·보행 연계체계 구축 13) 간선도로의 차량 소통 기능 회복 14) 수도권 서남부를 아우르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15)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환경·안전	5. 공원녹지 그린 네트워크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보 16)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한 그린 네트워크 구상 17) 공원 확충 및 하천 정비를 통한 공원 서비스의 질 향상 18) 도시 안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생활 안전성 향상
역사·문화·관광	6. 서남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 자산의 발굴·보전·활용 19) 지역 자산의 발굴·보전·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20)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21)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추진
복지·교육	7. 맞춤형 생활기반시설 공급 및 안심 교육 인프라 확대 22) 생활기반시설의 지역 격차 해소 및 맞춤형 공급 23) 창의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및 안심 교육 기반조성

자료: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 서남권의 분야별 현황

<표 7> 서남권 분야별 현황 및 특성

구분	분야별 현황 및 특성
도시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여의도 도심의 중심지 위상 미약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 추진 이전적지 등 미개발된 대규모 개방가능지 다수 보유
산업·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의 산업기능 감소 및 노후화 마곡지구 지식기반산업 거점 육성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다수 입지
주거(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공업지역 내 주공혼재지역 다수 분포 1인가구 및 외국인 밀집주거지 다수 분포 준공업지역 배후주거 역할 수행 목동, 가양 등 기성 시가지의 노후화 진행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 다수 분포, 간선도로 위주의 가로망으로 다수의 상습 교통정체구간 발생 광역급행철도,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 개선 추진 중 경인선, 경부선 등 철도시설로 인한 도로단절 구간 발생
환경·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곽지역 풍부한 자연환경 보호 대비 생활권 내부 녹지 부족 주요하천변 침수지역 존재
역사·문화·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근대산업문화유산(60~70년대) 분포 문래동 예술창작촌, 노량진 학원가 등 특화된 산업문화공간 분포 다문화 공간 및 다문화 커뮤니티 다수 존재
복지·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생활 서비스 시설의 불균형 발생 1인 가구 및 다문화 가구 증가

자료: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 서남권의 경우 1개 도심, 2개의 광역 중심, 3개의 지역 중심, 20개의 지구 중심으로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

<표 8> 서남권 공간관리 계획

구분	특성 및 내용
도심(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등포-여의도가 해당 여의도 글로벌 금융·업무 중심지 활성화 영등포 신성장거점&상업·업무·문화 중심지 육성
광역중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곡: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기반의 고용중심지 육성 가산·대림: G밸리 및 배후지역 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산업의 중심지 육성
지역중심(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동: 서남권 상업·문화 중심지로 육성 봉천: 산학연계 R&D 벨트 연계거점 육성 사당·이수: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고용기반 마련
지구중심(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개의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특성에 따른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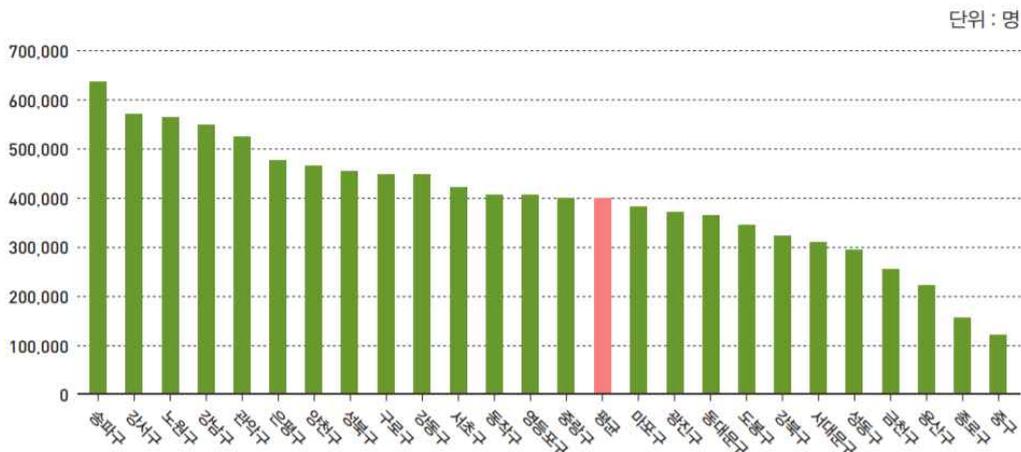
자료: 2030서울생활권계획, 서울시

라. 서남권 인구학적 현황

1) 일반 인구 현황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평균은 약 40만 명으로 서남권의 자치구 중 금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서울시 자치구 인구 평균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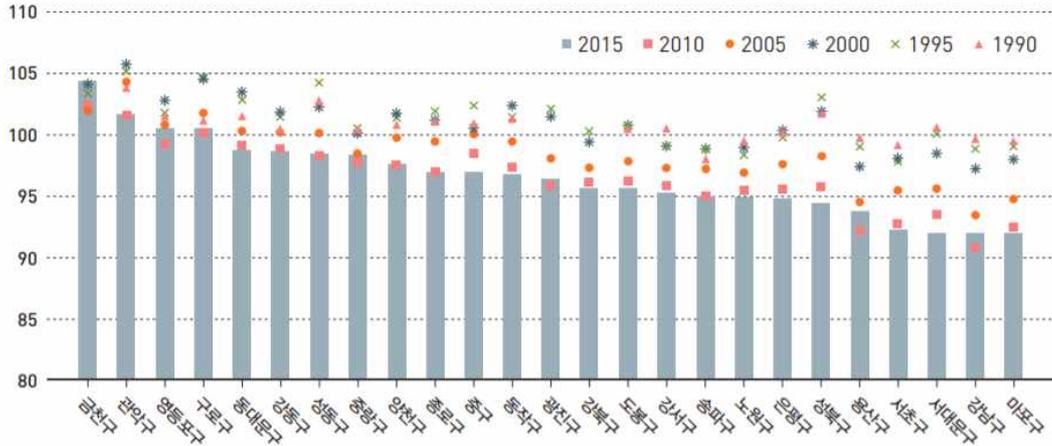
<그림 2> 자치구별 인구 통계



자료: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서울연구원

- 2015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관악구의 경우 1980년 큰 폭의 인구 하락 후 50만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천구의 경우 1990년 큰 폭의 인구 하락 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소폭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구로구의 경우 1995년 50% 이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대폭의 인구 하락이 있었으며, 영등포구는 1970년대 상주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으나 구로구, 금천구 등의 분구로 인해 현재 40만 명 수준 임
- <그림 3>과 같이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성비가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104.4명)였으며 이어 관악구(101.7명), 영등포구(100.5명), 구로구(100.5명) 순으로 나타나 상위 5개 자치구 중 서남권의 4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3> 서울시 자치구 성비비율



자료: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서울연구원

2) 거주 가구 현황

- 2015년 기준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많은 구는 양천구(2.77명)이며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적은 구는 관악구(2.12명)로 나타났음
- 이와 반대로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관악구(43.9%)이며, 양천구(20.0%)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서남권 7개 자치구의 1인 가구 비율은 30.9%로 서울시 자치구의 1인 가구 비율 평균인 29.5%보다 높고 서남권 내 자치구 간 차이가 컸음

<표 9> 서남권 자치구 1인 가구 비율, 연령대, 성비 비교(단위: %)

자치구	1인 가구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성비	
								남	여
강서구	26.2	0.6	17.6	24.7	16.4	15.5	24.7	47.0	53.0
양천구	20.0	0.7	12.2	20.3	18.5	18.2	30.1	47.9	52.1
영등포구	32.8	0.5	21.4	25.2	16.4	14.7	21.9	51.5	48.5
구로구	26.2	0.6	18.0	24.7	17.6	15.3	23.8	51.4	48.6
금천구	33.4	0.4	16.7	21.7	18.2	18.9	23.9	56.7	43.3
동작구	33.5	1.7	32.8	26.2	12.3	9.6	17.3	50.4	49.6
관악구	43.9	1.1	35.6	28.2	12.8	9.2	13.1	54.3	45.7
평 균	30.9	0.8	22.0	24.4	16.0	14.5	22.1	51.3	48.7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

3) 외국인 인구 현황

-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영등포구(25.2%), 금천구(25.2%), 구로구(24.0%), 관악구(18.3%) 4개 자치구가 서울시 평균인 16.9%보다 높음
-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동작구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기타외국인(유학생, 일반연수, 외국 국적 동포 등) 비율이 서남권 자치구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0> 서남권 자치구 외국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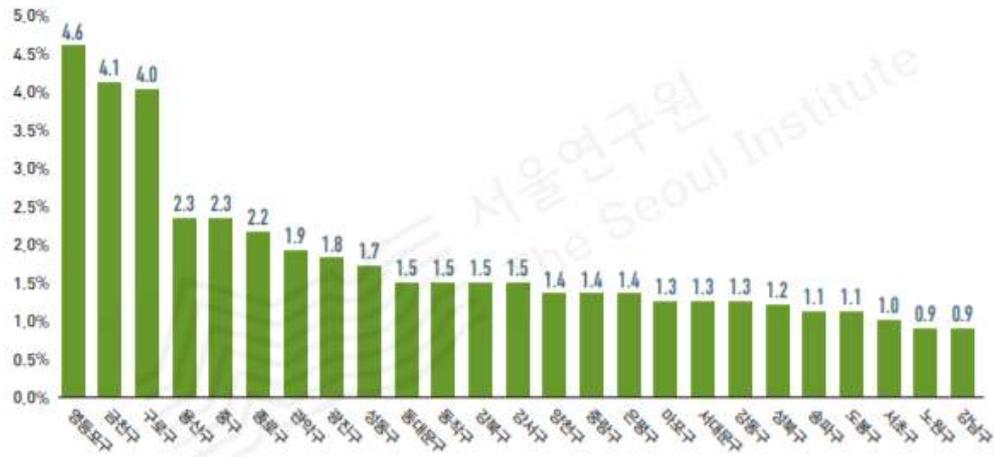
구분	외국인 주민 전체	한국국적 미취득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기타외국인		
강서구	12,532 (100%)	1,699 (13.6%)	1,590 (12.7%)	5,393 (43.0%)	2,074 (16.5%)	1,776 (14.2%)
양천구	8,152 (100%)	996 (12.2%)	1,072 (13.2%)	3,400 (41.7%)	1,409 (17.3%)	1,275 (15.6%)
영등포구	54,145 (100%)	13,644 (25.2%)	2,938 (5.4%)	30,126 (55.6%)	5,908 (10.9%)	1,529 (2.8%)
구로구	49,996 (100%)	11,995 (24.0%)	3,046 (6.1%)	26,866 (53.7%)	6,050 (12.1%)	2,039 (4.1%)
금천구	30,317 (100%)	7,647 (25.2%)	1,913 (6.3%)	15,883 (52.4%)	3,634 (12.0%)	1,240 (4.1%)
동작구	18,592 (100%)	3,004 (16.2%)	1,144 (6.2%)	11,861 (63.8%)	1,659 (8.9%)	924 (5.0%)
관악구	29,335 (100%)	5,368 (18.3%)	1,991 (6.8%)	17,116 (58.3%)	3,346 (11.4%)	1,514 (5.2%)
서울시	413,943 (100%)	70,077 (16.9%)	32,061 (7.7%)	241,789 (58.4%)	41,692 (10.1%)	28,324 (6.8%)

자료: 2019년 서울지역 서남권 자치구별 지역여건 분석,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4) 다문화 가구 현황

- 서울시 자치구 중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영등포구로 전체 가구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천구(4.1%), 구로구(4.0%)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서울시의 다문화가구 비율은 1.7%로 서남권의 3개 자치구가 타 자치구와 비교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4> 서울시 자치구 다문화가족 비율



자료: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서울연구원

마. 서남권 정치적, 사회적 현황

1) 정치적 성향

- 서남권의 국회의원 소속정당 현황을 보면 보수적 성향이 약한 정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청장 역시 보수적 성향이 약한 정당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의 경우 6기, 7기 동일 구청장이 당선

<표 11> 서남권 자치구 국회의원, 구청장 소속 정당 현황

자치구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19대)	구청장 (7기)	구청장 (6기)
강서구	(갑)더불어민주당 (을)새누리당 (병)더불어민주당	(갑)민주통합당 (을)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노현송)	새정치민주연합 (노현송)
양천구	(갑)더불어민주당 (을)새누리당	(갑)새누리당 (을)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새정치민주연합 (김수영)
영등포구	(갑)더불어민주당 (을)더불어민주당	(갑)민주통합당 (을)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새정치민주연합 (조길형)
구로구	(갑)더불어민주당 (을)더불어민주당	(갑)민주통합당 (을)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이성)	새정치민주연합 (이성)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민주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새정치민주연합 (차성수)
동작구	(갑)더불어민주당 (을)새누리당	(갑)민주통합당 (을)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이창우)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관악구	(갑)국민의당 (을)새누리당	(갑)민주통합당 (을)통합진보당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새정치민주연합 (유종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20

2) 서남권 사회적 신뢰도

- 가족, 이웃, 친구,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남권 전체의 사회적 신뢰도는 5.37점으로 5개 권역 중 2번째로 나타남

<표 12> 서울시 권역별 사회적 신뢰도

구분	종합	가족	이웃	친구	공공 기관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서울시	5.33	8.74	5.17	7.16	5.41	2.71	2.75
도심권	5.03	8.47	4.94	6.76	5.15	2.42	2.47
동북권	5.34	8.75	5.18	7.24	5.33	2.68	2.85
서북권	5.17	8.96	5.13	7.14	5.17	2.37	2.26
서남권	5.37	8.62	5.21	7.09	5.55	2.92	2.81
동남권	5.41	8.85	5.2	7.23	5.55	2.74	2.88

자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사회적 신뢰 통계(2019)

- 양천구의 사회적 신뢰도는 5.87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로 나타나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강서구가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높음

<표 13> 서남권 자치구 사회적 신뢰도

구분	종합	가족	이웃	친구	공공 기관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서울시	5.33	8.74	5.17	7.16	5.41	2.71	2.75
양천구	5.87	8.42	5.52	6.99	5.81	4.32	4.17
강서구	5.39	8.43	4.9	6.69	5.82	3.31	3.16
구로구	5.18	8.49	5.29	7.14	5.48	2.53	2.12
금천구	5.4	8.83	5.35	7.48	5.72	2.5	2.5
영등포구	5.29	8.68	5.44	7.32	5.55	2.38	2.35
동작구	5.08	8.84	5.13	6.94	4.94	2.34	2.32
관악구	5.31	8.82	5.1	7.34	5.44	2.6	2.58

자료: 서울 공공데이터, 서울시 사회적 신뢰 통계(2019)

바. 서남권 자치구 재정자립도

- 서남권의 2020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시 5개 권역 중 3번째 (25.0%)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보다 낮게 나타남
- 서남권 자치구 중 유일하게 영등포구(30.0%)만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를 상회하는 반면, 관악구(19.3%)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표 14> 서울시 권역별 재정자립도 및 서남권 자치구 재정자립도

구분	재정자립도	서남권 자치구	재정자립도
서울시 평균	76.1(본청 77.9)	양천구	25.2
자치구 평균	28.4	강서구	21.1
도심권	46.6	구로구	22.2
동북권	21.3	금천구	24.7
서북권	24.3	영등포구	30.0
서남권	25.0	동작구	26.4
동남권	42.7	관악구	19.3

자료: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서울시 재정자립도 통계(2020)

사. 서남권 산업단지 현황

- 2019년 4분기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1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개의 일반 산업단지가 있으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산업 단지가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음

<표 15> 서남권 산업단지 현황

구분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온수 일반산업단지	마곡 일반산업단지
위치	구로구, 금천구	구로구, 부천시	강서구
산단유형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로구청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성시기 (지정일)	1964년~1973년 (64.04.15)	1970년~1971년 (80.11.25)	2007년~2020년 (08.12.30)
지정면적	1,925천㎡	158천㎡	1,124천㎡
입주업체	11,593개사	225개사	150개사
고용지수	146,333명	1,970명	31,072명

아. 서남권 고등 교육기관 현황 및 대학의 지역연계

- 대학교 7개,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전문대학이 각 1개씩 총 11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함

<표 16> 서남권 대학 현황

자치구	대학명	학제
강서구	케이씨대학교	대학교
	정석대학	기술대학
	서울디지털대학교	사이버대학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기능대학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전문대학(3년제)
동작구	송실대학교	대학교
	중앙대학교(서울캠퍼스)	대학교
	총신대학교	대학교
관악구	서울대학교	대학교

- 시민사회분야의 특성화 대학인 성공회대학교가 구로구에 있으며, 동작구에 있는 중앙대와 송실대,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는 대규모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 중

<표 17> 서남권 대학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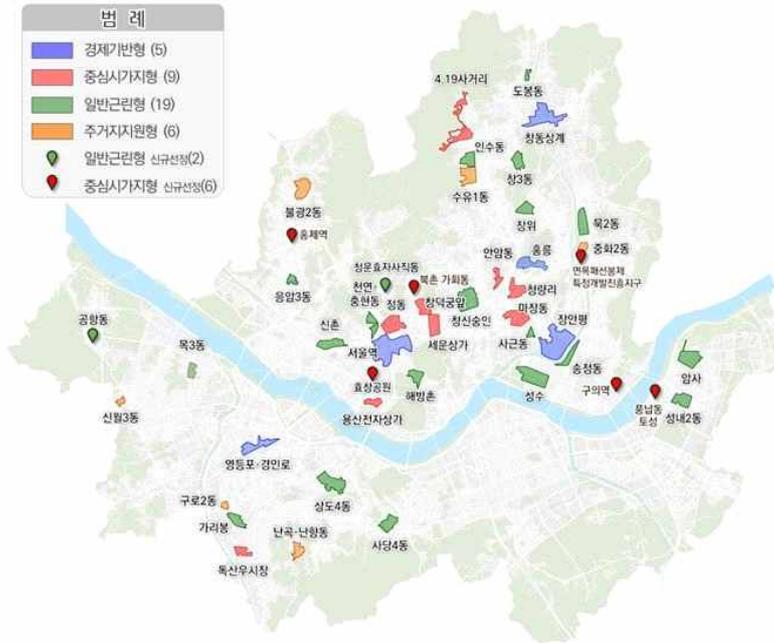
대학명	사업명	자치구	시작	규모
중앙대학교	중앙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흑석에서 靑龍난다’	동작구	2018	종합형 4년간 최대 100억
송실대학교	IT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송실동작창업 캠퍼스 구축	동작구	2020	
서울대학교	OSCAR 캠퍼스타운	관악구	2020	
동양미래대학	메이커스캠퍼스 구축사업	구로구	2020	단위형 3년간 최대 5억
성공회대	마을은 대학으로, 대학은 마을로 구로마을대학- II	구로구	2020	
KC대학	강서혁신창업 및 창의교육 사업	강서구	2020	

자료: 서울시청,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자. 서남권 도시재생사업 현황

- 서남권에서는 2020년부터 시작된 3개소 포함, 총 10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자치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그림 5>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자료: 서울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표 18> 서남권 도시재생사업 현황

자치구	사업명	서울시유형	사업유형	사업기간	추진단계
영등포구	영등포·경인로 일대	일자리거점 육성형	도시경제기반형	2017-2022	계획수립단계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	중심지특화형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2017-2022	사업실행단계
구로구	가리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16-2020	사업실행단계
구로구	구로2동 주거지원형 활성화 지역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19-2024	계획수립단계
관악구	난곡·난향동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17-2022	사업실행단계
동작구	사당4동 일반근린형 활성화 지역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19-2023	계획수립단계
동작구	상도4동 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15-2018	사업실행단계

양천구	신월3동 주거지원형 활성화 지역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20-2024	계획수립단계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20-2024	계획수립단계
강서구	활기넘치는 시장길을 중심으로한 목3동 마을활력 프로젝트	근린재생형	근린재생 일반형	2020-2024	계획수립단계

자료: 서울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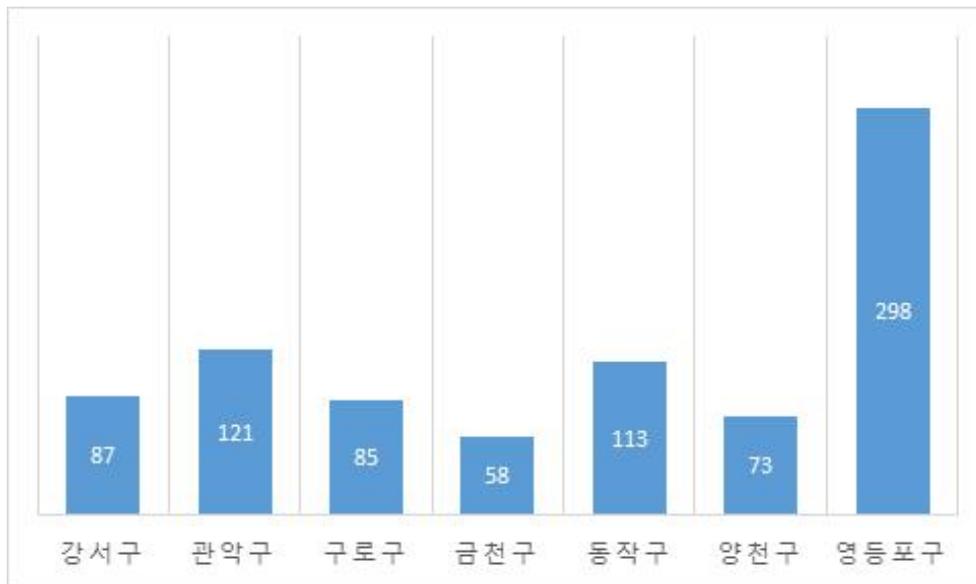
Ⅲ. 서울시 서남권 시민사회의 특징 및 현황

1. 서남권 시민사회의 일반현황

가. 서남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 2019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835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서남권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321개가 중앙부처, 514개가 서울시에 등록됨
- 서남권 자치구 중 영등포구에 가장 많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으며, 관악구보다 약 2.5배, 금천구보다 약 5배의 단체가 영등포구에 속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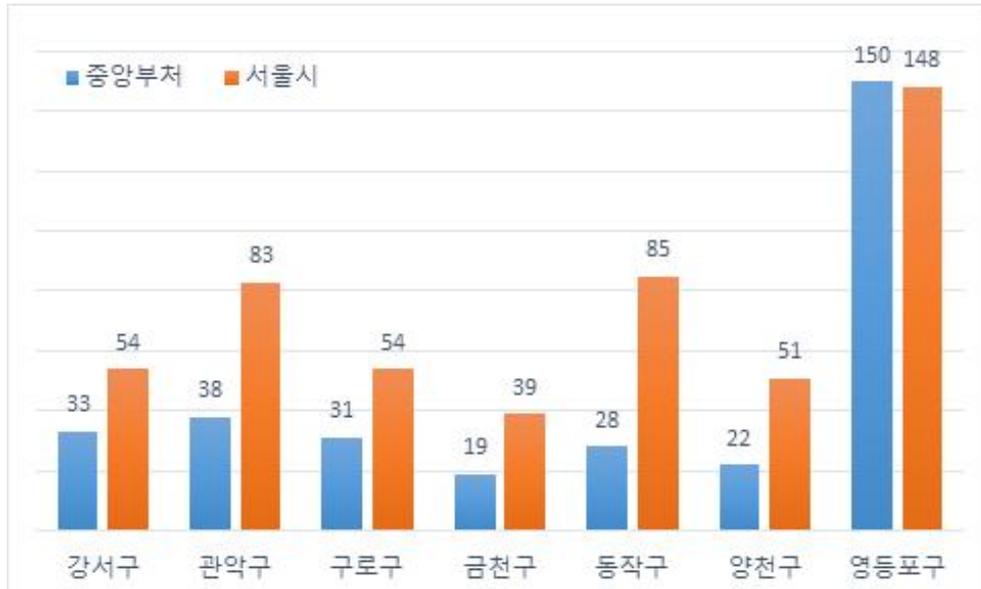
<그림 6> 서남권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 대부분의 서남권 자치구에서 서울시 등록단체 수가 중앙부처 등록단체 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영등포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록단체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 7> 서남권 자치구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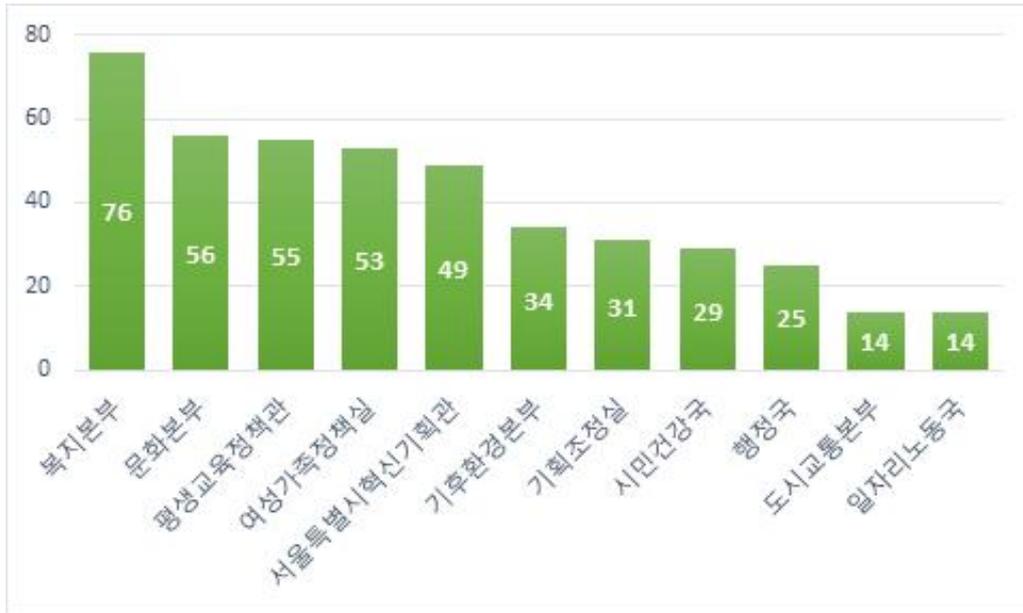
- 서남권 비영리민간단체의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중양부처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순이며 서울시는 복지본부, 문화본부, 평생교육정책관,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순임

<그림 8>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관별 서남권 전체 현황분포(중양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그림 9>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소관별 서남권 전체 현황분포(서울시)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 자치구별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와 서울시 모두 <그림 9>와 <그림 10>의 상위 5개 소관부서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음
- 중앙부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보건복지부가 자치구별 분포도의 1위, 2위로 빈도수가 높았고, 서울시의 경우 복지본부과 평생교육정책관이 1위, 2위로 나타났음

<표 19> 비영리민간단체 소관별 각 자치구별 현황분포(중앙부처)

구분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1위	행정안전부 (7)	외교부 (10)	외교부 (9)	보건복지부 (4)	여성가족부 (5)	통일부 (5)	행정안전부 (31)
2위	여성가족부 (6)	환경부 (5)	통일부 (6)	환경부 (2)	보건복지부 (4)	문화체육관광부(4)	보건복지부 (26)
3위	보건복지부 (3)	통일부 (4)	고용노동부 (4)	외교부 (2)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3)	외교부 (14)
4위	외교부 (3)	행정안전부 (3)	보건복지부 (4)	문화체육관광부(2)	문화체육관광부(3)	1~3순위 외 부처별 1개 수준	통일부(14)
5위	통일부 (3)	보건복지부 (3)	행정안전부/환경부/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외교부/통일부 (2)		환경부(13)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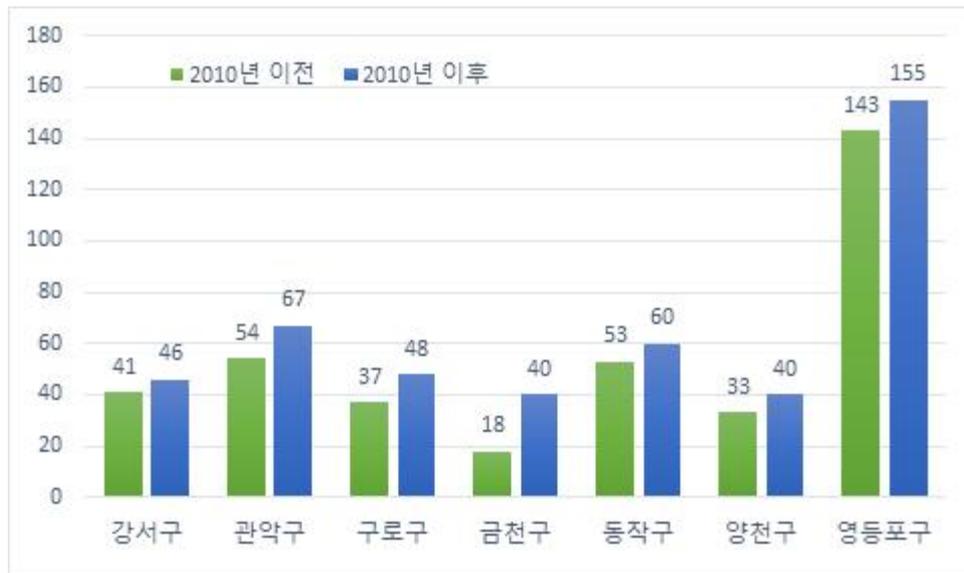
<표 20> 비영리민간단체 소관별 자치구별 현황분포(서울시)

구분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1위	복지본부 (12)	평생교육 정책관(13)	복지본부(11)	문화본부(5)	여성가족 정책실(16)	평생교육 정책관(10)	복지본부 (23)
2위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6)	복지본부 (11)	평생교육 정책관(8)	복지본부 (4)	복지본부 (9)	문화본부 (7)	여성가족 정책실(18)
3위	기후환경본부 (6)	문화본부 (11)	여성가족 정책실(7)	행정국 (4)	문화본부 (9)	복지본부(6)	평생교육 정책관(17)
4위	문화본부 (5)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9)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6)	시민건강국 (3)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 (8)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6)	문화본부(15)
5위	행정국 (4)	기후환경본부 (6)	문화본부 (4) 시민건강국 (4)	여성가족정책 실(3)	기후환경본부 (8), 행정국(8)	시민건강국 (5)	서울특별시 혁신기획관(13) 기획조정실 (13)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 2010년대 전후 서남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를 비교한 결과 2010년대 이후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모든 자치구에서 이전보다 많았음

<그림 10> 서남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비교: 2010년 전후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 4분기 현황)

나. 시민협력플랫폼 및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

- 현재, 시민협력플랫폼을 3개 자치구, 민민협력기반 조성사업을 2개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음
- 시민협력플랫폼

<표 21> 서남권 시민협력플랫폼 진행 자치구

자치구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강서구	2019-2020	강서양천 민주의 집 사람과공간 외 5개 단체
양천구	2019-2020	사단법인 양천마을 외 2개 단체
구로구	2019-2020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 외 10개 단체

- 민민협력기반조성 사업

<표 22> 서남권 민민협력기반조성 사업 진행 자치구

자치구	사업기간	컨소시엄 단체
관악구	2019-2020	관악공동행동 외
동작구	2019-2020	사단법인 동그리마을넷 외

다. 서남권 중간지원조직 현황

1)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5년부터 서남권 각 자치구별로 설립되었으며 동작구만 직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표 23> 서남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

자치구	설립연도	수탁기관
관악구	2015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금천구	2015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구로구	2016	구로 사회적경제 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	2016	동작구 직영
양천구	2017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영등포구	2017	영등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서구	2019	사단법인 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그림 1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현황



2) 마을자치센터(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영등포구와 동작구를 제외하고는 자치구 기반의 단체들이 수탁운영하고 있음

<표 24> 서남권 마을공동체 관련 중간지원조직 현황

자치구	센터명	수탁시작	수탁기관
강서구	강서구 마을자치센터	2019	재단법인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양천구	양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사단법인 양천마을
영등포구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	2019	사단법인 마을
구로구	구로구 마을자치센터	2019	사단법인 구로시민센터
금천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7	사단법인 마을인교육
동작구	동작구 마을자치센터	2018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관악구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2019	사단법인 아우름애

2.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사와 흐름

가. 강서구

- 1987년 6월 항쟁과 그해 12월의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강서구와 양천구에서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을 하던 이들을 중심으로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는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강서·양천지부’로 출발하여 ‘겨레사랑주민회’를 거치면서 시작되었으며 우장산 살리기 운동과 공산문화유적 보호 운동, 신트리 백제박물관 건립 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었음
- ‘강서양천시민회’는 대중적인 주민사업을 추진하여 강서구와 양천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았지만, 1990년대 말경 상근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와해 되었음.
- 1999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박범진의원 낙선운동이 계기가 되어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가 출범하였고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2000년 창립), ‘서울남서여성민우회’ (1994년 창립), ‘강서양천여성의전화’ (1998년 설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강서지회, 중등강서지회, 초등강서지회), ‘강서양천열린사회시민회’가 월2회 연대회의를 통해 강서양천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함
- 이후 2007년 ‘교육자치시민회’ 창립 후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에 참여하며 ‘강서양천시민연대’로 재편되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서구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등과도 연대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 과정에서 환경, 양성평등, 인권, 가정폭력, 교육개혁 등 의정감시단, 환경보호, 주민소환제, 민주적학교운영위원회, 교육위원선거 등에서 성과를 내며 시민사회에 자리매김함
-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작되면서 ‘마을넷’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연대 모임으로 대체되면서 ‘열린사회강서양천시민회’는 해소됨
- 2011년 강서시민단체활동가 학습모임으로 시작된 ‘강서지역사회네트워크’가 지역내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서울지역활동가 학습모임 ‘지역너머’ (2012년 7월), 강서인문학커뮤니티사업과 협동조

합학교, 환경영화상영제 등의 사업을 추진 함.

- 2014년에 비전워크숍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매체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마을미디어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활동이 지속되어 2015년 강서마을신문 ‘시민의 소리’가 발간됨
- 그러나 2019년 구심활동가의 부재로 결집력과 행동력이 약화되어 ‘강서지역사회네트워크’ 활동이 중단됨
- 2015년 이후에는 지역현안과 이슈에 따라 단체들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음. 2015년에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습지 매립 반대·골프장 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44개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2016년에는 24개 단체가 ‘강서옥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불매운동과 지역 마트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음
- 또한 2017년 2월, 강서구 시민사회는 고 황금자 할머니를 비롯해 강서구에 거주했던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고자 강서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고, 95개 단체가 참여해 총 6,5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한 뒤 2019년 11월 11일, 마곡 유수지 공원에 ‘강서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도 함
- 강서평화소녀상건립 추진의 경험으로 시민단체 간의 연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현재는 서울시 협치사업의 하나인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포괄적 네트워크와 활동에 대한 구상을 함께하고 있음

나. 양천구

- 양천구는 88올림픽을 계기로 목동과 신정동에 국가주도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1988년 강서구와 분구가 됨
- 1980년대 중반 목동지역 재개발과정에서 치열한 철거민투쟁이 있었고, 공정감시선거단 중심으로 출범된 ‘열린사회 강서양천시민회’를 시작으로 양천구의 시민사회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그러나 양천지역 회원들은 지역현안과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개인들이어서 지역시민사회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가

지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했음

- 1999년 지하철노조와 지역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탈북자와 취약계층의 거주지역에 ‘은정지하철공부방’을 열었고, 공부방을 통해 ‘양천지역 시민회’ 회원과 단체 활동가들의 소통이 비정기적으로나마 시작됨
- 양천구 시민사회의 두드러진 등장은 1996년 초등학교 직영급식운동을 계기로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교육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음
- 1999년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에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양천구의 박범진 의원 낙선운동을 하였지만 양천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자리 잡지는 못 했음
- 1990년대까지는 양천구 시민단체의 수가 적어 ‘남서여성민우회(1994)’와 ‘강서양천여성의전화(1998)’가 대표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이 시기(1990년대)에 들면서 양천지역에 ‘행복중심서남생협’, ‘한살림서부지부’, ‘별내생협(양천아이쿱전신)’이 생겨났고 이후 ‘인드라망생협(2012)’을 포함하여 4개 단체가 지역기반을 토대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음
- 2002년에는 양천지역에 장애인단체 ‘사람사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생기면서 ‘남서여성민우회’와 ‘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 함께 참여하는 ‘양천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를 주도함. 2010년 해체될 때까지 ‘장애인권영화제’ 등을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에 장애인 인권 의제를 처음으로 제기
- 양천의 시민단체들은 기본적으로 여성, 소비자, 장애인 등 당사자 운동의 단체들이 근간을 이루며 발전하였음. 이중 또 하나의 흐름은 아동청소년 부문으로 신시가시아파트 중심지역과의 현격한 경제적 격차지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이 본격적으로 생겨남
- 목동에선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2007)’와 ‘기린지역청소년센터(2008)’, 신정지역에선 ‘여성민우회’의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2009)’, 신월지역에선 성공회의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4곳이 생겨났음

- 이후 ‘양천아이콤플생협’ 이 회원과 사업 중심 지역을 뛰어넘어 신월과 목2동의 취약지구에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당사자 운동의 한계를 극복해나가고 있음
- 2010년대 들어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대사회적 의제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정치와 생활상의 의제를 다루는 ‘양천생활자치네트워크’(2010년)를 결성함.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양천아이콤플’, ‘한살림’, ‘행복중심’ 등의 생협과 지역아동센터 등 7개의 단체회원 및 전교조 활동가 등 지역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개인회원을 포함한 단체로 출범
- 한편에서는 목2동에서 터를 잡게 된 청년주민들(플러스마이너스1도씨)이 관의 도움 없이 지역주민들의 후원으로 모기동마을축제(2011)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
- ‘생활자치네트워크(2010)’가 ‘양천마을넷(2013)’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울시의 공동체 강화를 위한 마을과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통해 양천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빠르게 촉진
- * ‘어린이책시민연대양천지회’, ‘은행정책마당’, ‘양천노동인권센터’,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사)나눔과동행’, ‘(사)희망연대’, 장애인자조모임 ‘세울’, 대안학교 ‘내일새싹학교’, 위기여성과 모자가정을 지원하는 ‘내일의집’,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광범위한 부문의 시민단체들이 마을 네트워크에 합류하였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그룹의 일부가 추가로 합류
- 2013년 하반기에는 ‘양천마을넷’이 주축이 되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의 단위와 함께 ‘양천사회적경제협의회’를 출범시킴
- 2014년, 민선6기 새로운 구청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구청장정책기획단, 부문별 혁신기획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민관의 상호이해와 파트너십을 높이는 계기를 맞으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단위들의 네트워크와 중간지원조직체계 만들기를 본격화 함.
- 양천지역 시민사회는 현재 마을의 활동자원들을 최대한 가동하여, 가능한 대부분의 중간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음. ‘마을공동체생태계지원단(2014)’, ‘양천사회적경제생태계사업지원단(2014)’, 이후에 법인단체로 전환한 양경사협과 ‘(사)양천마을’이 각각 양천경제통합지원지원센터(2017)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2018)를 수탁하였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2016), 신월생태계건강기반조성사업단(2016), 시민협력플랫폼(2017)을 갖춤

- 2017년 양천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을 계기로, 활동가 워크숍에서 양천시민사회에 공익활동지원조직의 필요가 제기된 바 있고, 양천시민사회 전체의 현 지점을 진단평가하고 전망을 세우는 구체화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음

다. 영등포구

- 일제 말부터 1980년대까지 영등포는 경인철도의 교통체계, 한강변의 풍부한 공업용수로 인해 재래시장에서 대규모 공장(밀가루, 설탕, 면직)까지 중상공업이 발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도 정착하는 곳이었음
- 열악한 노동조건에 문제의식을 느낀 영등포산업선교회에 외국에서 온 선교사(주로 사울 알렌스키의 주민조직론과 해방신학을 기반)와 뜻있는 목사들이 모여 산업선교를 시작
- 1973년 조지송, 인명진 목사의 부임과 함께 노동자 소모임 활동이 활성화 되면서 당시 근로기준법에 기반한 노동조합운동의 학습의 장이자 문화센터, 생활자조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음
- 민주노동조합운동의 토대가 되었고, 70년대 민주화 운동과 결합하여 반독재 세력의 중심부로 자리 잡았음. 이후 정권의 탄압으로 조지송, 인명진 목사 투옥, 주요 활동가 연행 및 사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됨
- 1980년대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하던 민주노조운동은 영등포내 산업의 변화(대규모 공장의 이전), 민주노조운동의 합법화로 그 영향력이 줄어들음
-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운동이 꿈틀대기 시작했음
- 대학생 중심의 대안과 연합하여 협동조합운동의 기틀을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 ‘다람쥐회’, ‘서로살림생협’, ‘서울의료생협’, ‘밝은 공동체(활동가 공동육아)’가 자리를 잡는데 일조함
- 이 시기에는 협동운동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역에서부터 바꾸어

- 보자는 가치를 내걸고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협동학교(활동가 양성과정)를 진행하며 지역활동가를 양성하기 시작
- 2000년대부터 2010년대에는 영등포내 대안학교로 ‘하자센터’가 열리고 이들 졸업생들의 사회적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자원과 관계망들을 연결하기 시작
 - 한국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 ‘오가니이션 요리’, ‘트래블러스 맵’, ‘리블랭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가 및 사회활동가를 양성하기 시작
 - 이 시기에 문래동의 노후화된 철제공장에 예술가, 문화기획자, 점거활동가 등이 하나둘 모여 그들만의 문화지구를 조성함
 - 영등포내 지역활동가(진보정당, 협동조합, 여성운동, 생태운동, 지역노조, 환경운동)들이 산업선교회 협동사업부를 중심으로 매달 한번 만나 밥을 먹는 목요밥상을 시작
 -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에 같은 목소리로 대응하게 되었고 학교 통학로 문제, 난개발 문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역생활의제에 구청과 다른 의견을 내는 단위가 형성됨
 - 2012년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지역 현안에 대해 더 깊이 개입하고 더 많은 시민과 조우할 수 있는 단위를 고민하게 됨
 - 2012년 ‘목요밥상’에 참여하는 단체 중 지역의제 중심으로 고민하는 단체들이 모여 ‘영등포마을넷’을 결성하고 이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분야에 주요한 민간파트너로 구청과 협력하기 시작함
 - 2017년 이후 ‘영등포마을넷’은 느슨한 네트워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영등포마을’을 설립하여 영등포구 마을지원센터 운영, 혁신교육지구의 틀 마련, 각종 지역활동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2018년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위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을 중심으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개인의 후원 통해 2019년 10월 타임스퀘어에 소녀상을 제막하게 되었고, 이후 후속 모임을 지속하고 있음

라. 구로구

- 1964년부터 구로에 구로공단(공식명: 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되면서 당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이 생겨남. 1970년 전태일의 죽음 이후 구로공단 일대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운동이 시작됨
 - 1970년대 구로공단의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 인상을 비롯한 노동조건 개선, 조합 결성, 중간관리자 배척 등의 요구가 중심을 이루었음. 노동자 스스로 조합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하기 어려웠던 시기였으므로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도시산업선교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구로구의 노동운동과 결합하기 시작함. 가리봉전자의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부흥사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영등포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에게 노동 권리와 인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친목 활동을 독려함
 - ‘신명교회’, ‘새터교회’, ‘남부교회’, ‘구로은강교회’, ‘디딤돌교회’, ‘이웃교회’ 등 이른바 민중교회들이 합법적 공간과 네트워크를 제공하였고 이 민중교회들을 중심으로 지역 탁아소와 지역 공부방들이 생겨남. 민중교회들은 개별 교회의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로지역 ‘민중교회운동연합(구로민교)’이라는 지역 연대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음
 - 1985년 구로동맹파업이 일어나고 이를 계기로 ‘서울노동운동연합’, ‘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이 만들어진 뒤 1986년 박영진 열사의 분신으로 항거가 일어남. 이후 1987년 6월항쟁 후 저항성이 강한 사회단체들이 구로지역에 나타나게 됨
- * 한국여성노동자회(1987~현재),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1987~현재), 구로노동자문화회(1988~2006),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구로지부(1988~현재), 한빛독서회(1988~1997),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구로노동상담소(1989~1997), 노동인권회관(1989~1999),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구로지부(1990~1994), 다우리노동자회관(1992~1997), 서울진보청년회(1994~1998) 등 1990년대 초에는 20개가 넘는 사회단체가 활동
- 1989년 구로로 이전해 온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여성노동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방과후학교를 만들고 어머니교실, 주부대학을 개설하였으며 1992년 ‘서울여성노동자회’로 이름을 바꾸고 1995년 당시로서

는 드물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함

-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구로지부’는 1992년 ‘구로겨레사랑주민회’를 거쳐 1998년 ‘열린사회구로시민회’로 개편됨
- ‘남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은 1992년 ‘구로청년회’로 이름을 바꾸고, 1995년에는 내부에 지역사업부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서울진보청년회’는 1995년 구로에서 지역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1996년 구로지역으로 이전해 옴
- 1995년 지역 연대체인 ‘구로지역민주단체협의회’는 지역활동을 내걸고 ‘구로사랑민주협의회’로 재편되고 ‘구로지역발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민주당과 연합하여 지방선거에 도전하기도 함
- ‘다우리노동자회관’과 ‘한벗독서회’ 등 7개 단체는 풀뿌리지역시민운동단체로의 통합적 변화를 모색하여 2년간의 추진 끝에 1997년 지방자치·마을공동체·시민교육·환경·복지·문화·평화통일사업을 하는 종합형 지역시민단체로 ‘구로시민센터’를 창립함
- 1998년에는 주민의 건강과 복지, 생활문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자치 운동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운동연구소가 창립되어 푸른교실 운영, 지역정보화사업, 주민건강사업, 주민정치조직화사업, 구로생협 창립을 시도하였음
- 이 시기에 지역의 부문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1994년 서울시 최초의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다우리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보육운동가들은 대중성과 보육전문성을 고민하며 1997년 ‘한국보육교사회’를 발족함
- ‘구로공해대책위원회(1989)’, ‘녹원생협’ 등의 지역환경운동이 태동하고 ‘푸른치과’, ‘구로의원’, ‘구로한의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원 약국 등의 지역보건의료운동도 진행되기 시작함
- 1988년 ‘건강의집’에서 주말진료활동을 시작한 대학생과 보건의료인들은 1991년 공동체약국인 ‘우리네약국’을 개소하고 ‘우리네약국’이 10여년간 활동하여 모은 기금 출연을 바탕으로 2000년 보건복지전문 시민단체로 ‘구로건강복지센터’를 창립하게 됨
- 2001년 민중연대 출범에 따라 지역의 일부 단체는 ‘서울남부민중연

- 대’로 모여 활동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사안별 연대를 해오다 2008년 10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활동을 위한 연대조직으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만들어져 현재까지 활동해오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구로청년회’가 모태가 되어 지역사회에 ‘구로여성회’, ‘구로푸른학교’, ‘금천청년회’ 등의 단체가 만들어짐
 - ‘구로여성회’는 2003년 여성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든 여성단체로 문화동아리, 아이들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와 체험활동 그리고 여성들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2011년 여성환경운동단체인 ‘여성환경연대’의 지역조직으로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이 활동을 시작하였고, 여성의 관점에서 생태적 대안을 찾고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만들고자 함께 하고 있음
 - 이 시기에 영상기록을 꾸준히 해 온 영상활동가들의 노력은 현재 ‘구로마을TV’로 이어짐
 - 2012년 주민들간의 새로운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고, 생활과 노동이 결합된 생활협동네트워크를 지향하며 ‘구로민중의집’이 창립하여 수요나눔밥상, 구로FM, 공동체활동과 공간나눔사업을 해오고 있음

마. 금천구

- 금천구 시민사회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 구로공단의 배후 단지로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야학과 민중교회, 노동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음
- 금천구 분구 이전에는 노동, 교육, 환경문제에 대해 사회성 짙은 이슈 파이팅이 있었지만, 1995년 분구가 되면서부터는 금천구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노력들은 감소하였음. 그러나 금천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음
- 분구 이전에는 청소년 지원활동에 주력한 ‘새터교회(1987)’, 노인들의 문해교육을 위한 ‘살구평생학교’, ‘살구따뜻한밥집’, ‘살구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한 ‘살구여성회(1989)’, ‘금천생협(1993)’

- 이 주활동 단체였음
- 분구 이후 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모임인 금천동화읽는어른모임 ‘함박 웃음’ 이 2002년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이 시기 환경 이슈의 단체들이 지역에 등장하기 시작함. 2004년경 환경 관련 학습모임으로 시작한 숲지기강지기는 생태교실, 감로천생태탐사, 한내천생태탐사 등 모니터링 활동으로 활동이 확대되었음
 - 2006년 ‘(사)생명의 숲’ 호암산 프로젝트 사업 종료 후 관리운영에 주력하기 위해 ‘살구여성회’와 ‘숲지기강지기’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창립한 ‘금천생태포럼’은 현재까지 생태환경교육, 숲놀이 교육, 강사양성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2007년 이전까지 구로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어린이날 행사를 전교조 초등교사, 진보정당, 마을단체 등 현재 25여개 단체가 참여하여 2007년부터 금천구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 선거 이후 서울시와 금천구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혁신교육,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시범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에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센터 등이 설치되었음
 - 2011년 창립한 ‘금천구사회적기업가네트워크’가 2013년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로 전환되었고, 2015년부터 금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함
 - 2012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소년교육문화그룹이 ‘꿈지락네트워크’를 설립하여 관악구와 금천구에서 활동하게 됨. 이후 2016년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공간 ‘청춘뿔-딩’을 오픈한 뒤 ‘꿈지락네트워크’가 수탁운영 함
 - 2016년 3월 ‘금천교육네트워크’는 정기총회에서 “민에 의한 민의 지원과 민간진영의 책임있는 역할을 높이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6년 12월 26일 ‘사단법인 마을인교육’을 창립하였음
 - (사)마을인교육이 2017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지원사업

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

바. 관악구

- 관악구는 1960~70년대 서울 도심 개발과정에서 강제 이주당한 철거민들이 대거 밀집한 지역임. 특히 1973년 영등포구에서 관악구로 편입된 신림동, 봉천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으로써의 지역운동, 주민운동, 시민운동이라고 특징화 할 수 있음
- 민주화의 중심에 있던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관악지부’ (1987) 또한 1987년 이후 지역주민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악동작지역교사협의회(1988)’, ‘봉천놀이마당(1988)’, ‘관악지역노동자협의회(1989)’를 결성, 지지, 지원하였음. 이후 1992년 대선투쟁에서 난곡주민회, 봉천3·6동, 봉천5·9동과 연대활동을 함께 하는 등 지역빈민운동과 연관되어 활동함
- 1973년 시작된 ‘난곡국수모임’을 관악지역운동의 출발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함. ‘난곡국수모임’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부방, 난곡희망의료조합 등을 설립 운영하였고, 현재 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1970년대와 1980년대 난곡을 중심으로 ‘난곡지역협의회(1988)’와 봉천동 달동네 곳곳의 공부방, 탁아소, 민중교회, 도서관 등을 거점으로 주민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1990년대 초반은 ‘난곡주민회(1991)’, 봉천3·6동 ‘주민회준비모임(1990)’, 봉천5·9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1991)’ 등 권역별 주민조직이 적극적으로 나타남
- 1995년 주민들과 생활밀착적인 활동을 경험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재개발과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악주민연대’가 출범함. ‘관악주민연대’는 동단위의 주민조직과 권역별 활동 단위들을 모아서 구단위의 지역운동 연대체로 탄생하였음
- 동시에 지역해체 이후 늘어나는 복지에 대해 주민을 주체로 만드는 새로운 사회복지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관악사회복지(1995)’를 별도

의 단체로 만드는 과정도 있었음

- 199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 장애인, 위기가정을 위한 단체인 ‘관악자활지원센터(1996)’,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1997)’,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1997)’, ‘신림청소년쉼터 우리세상(1998)’, ‘위기가족공동체살림터(1998)’, ‘난곡사랑의밥집(1999)’,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1999)’, ‘SOS기금회(1999)’가 탄생하였음.
- 2000년대 관악구의 재개발이 완료되면서 빈민운동 기반의 활동은 임대아파트 주민의 권리 찾기 활동으로 지속 되었고 새로운 주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단체들도 생겨났음
- ‘관악공동체라디오(2004)’, ‘푸른공동체살터(2006)’, ‘관악도시농업네트워크(2007)’,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2008)’,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 관악지부(2009)’ 등의 다양한 단체가 생겨나면서 지역현안을 통한 일상적 연대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이 시기 또 다른 주목점은 ‘관악지방자치연대(2002)’, ‘531지방선거관악네트워크(2006)’, ‘관악유권자연대(2010)’ 등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 활동임. 특히 다양한 지역단체의 대표들이 월례회의를 통해 지역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던 ‘참여자치관악연석회의(2003)’는 현재 관악공동행동의 모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2006년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예산분석 및 감시와 예산참여운동을 전개함. 이는 본격적인 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전 일상적 연대활동을 통해 2011년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라는 상설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성과의 기반이 되었음.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19년 해소되기 전까지 지역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로서 중심역할을 함
- 2010년대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을 통해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특징됨
- 또한 ‘세상과 연애하기(2011)’, ‘작은따옴표(2014)’, ‘관악청년네트워크 판청(2018)’, ‘아야어여(2018)’ 등 청년·문화·예술 단체, 생활문화를 나누는 다양한 공동체, 공간공유 활동이 등장함

- 이 시기에는 기존 지역활동의 경험을 사회적경제 형식으로 변화 성장 시킨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2012)’,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2015)’, ‘서로돌봄사회적협동조합(2017)’, ‘협동조합관악위즐(2018)’, ‘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2019)’ 등의 주체들도 등장하게 됨
-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의 센터 위탁을 위해 ‘관악마을마당(2012)’을 설립한 후 사회적경제와 통합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2016)’을 창립하기도 함
- 2018년 분산된 정책의 변화를 좀 더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의 논의를 거쳐 상설연대조직으로 ‘관악공동행동’을 창립함. 현재 ‘관악공동행동’은 시민기반위원회, 시민정치위원회, 시민협력위원회 등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사. 동작구

- 동작구는 지역운동의 역사와 전통이 강한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노량진청년회’, ‘용흥청년회’ 등과 같은 자율적인 여러 청년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였음
- 이러한 청년단체 활동의 전통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부정선거에 맞서 서울지역 최초로 투쟁에 나섰던 성남고 학생들의 3.17의거, 중앙대·숭실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한 4.19혁명, 중앙대·숭실대·충신대생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에 맞서 벌인 반독재민주화 투쟁, 1987년의 6월 민주항쟁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짐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1980년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관악동작지부’, 1990년대 ‘열린사회시민연합관악동작민주시민회’, 2000년대 ‘한살림관악동작지부’ 등이 생겨났고 이 시기에는 사당동, 신대방동 지역 강제철거반대 운동 등이 주를 이룸
- 하지만 이들 조직은 기본적으로 전국(서울)조직의 지부라는 점, 주로 관악구에 근거한 조직이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음
- 2000년대 마을공동체 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지역시민사회

단체의 형성은 2004년부터 활동한 ‘희망동네(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가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음

- ‘희망동네’는 자율적인 주민단체로, 지역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면서 동작주민페스티벌, 동작구의정감시단 활동, 저소득층공부방 사업과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동작구지역단체협의회 결성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 2005년부터 시작된 ‘평화나비축제’를 매개로 2009년 설립된 ‘좋은 세상을만드는사람들’은 여성·청소년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여성주의 모임, 학교밖 청소년 지원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동작지역에서 자율적인 지역시민사회를 형성하고 본격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 2005년 ‘사단법인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의 창립으로 다문화센터를 만들고 지원하는 기초토대가 만들어졌고,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지원 활동도 시작됨
- 2010년대 동작구 지역시민사회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을 통해 다양한 단체들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이함
- 이런 정책적 지원으로 2012년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조직 ‘마음껏’, 2014년 지역시민사회 네트워크조직 ‘마을넷 동그리’의 탄생과 활동으로 이어짐

3. 활동가가 바라본 서남권 시민사회의 주요 특징과 서남권NPO센터의 필요성

<표 25> 서남권 설문조사, FGI, 결과공유회 개요

<p>■ 워킹그룹 대상 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년 5월 29일(금) ~ 2020년 6월 03일(수) ○ 대상: 자치구 별 워킹그룹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3명	2명	2명	1명	2명	2명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식: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한 자치구 특성 분석 						

■ 워킹그룹 및 활동가 대상 FGI

- 일시
 - 강서구, 양천구: 2020년 06월 25일 10:00 ~ 12:00
 -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2020년 06월 24일 09:00 ~ 12:00
 - 관악구, 동작구: 2020년 6월 22일 10:30 ~ 12:30
- 대상: 워킹 그룹 및 자치구 활동가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3명	2명	2명	1명	2명	3명	3명

- 진행방식: 자치구 일반현황,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심층 인터뷰 진행

■ 결과공유회

-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11:00 ~ 13:00
- 장소: 영등포 카페봄봄
- 대상: 워킹 그룹 및 자치구 활동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1명	2명	2명	1명	2명	4명	5명

가. 자치구별 특성

1) 강서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서울시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자치구임
- 주거지역이 많은 곳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지만 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은 거의 없음
- 기초네트워크가 비교적 잘 조직되어 있으며 20년 이상의 단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 주체가 시민사회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음
- 이중 노동인권 중심의 시민사회 단체와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민중의 집을 대표기관으로 한 컨소시엄에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KC 대학이 강서구와 연계는 잘 되어 있지만, 시민사회영역과 대학의 연계 활동 지점은 거의 없음
- 도시재생, 마을 자치, 사회적경제영역과 시민사회영역과의 네트워크 역시 거의 없는 지역적 특성을 보임

2) 양천구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사회적 신뢰도가 가장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역시 2번째로 높음. 특히, 마을자치, 사회적경제, 복지 등 분야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구임
- 25여 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양천마을을 중심으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남
-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다른 구와 다르게 시민사회 영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하여 협력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간지원조직 활동을 통해 형성된 주민 모임, 청년 모임을 시민사회영역(비영리 영역)으로 연결하기에 가장 특화된 지역으로 지역활동가들의 FGI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발견되었음

3) 영등포구

- 전통적인 시민사회 영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노동, 인권, 장애 등의 의제형 활동이 활발함
- 목요밥상이라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슈형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영등포마을넷을 중심으로 마을활동 네트워크가 형성된 후 사단법인 영등포마을이 설립되었음
-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의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재생, 마을자치, 시민사회영역 간의 교류는 다른 구처럼 거의 없는 실정임
- 시민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센터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임

4) 구로구

- 다양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민협력플랫폼의 포괄적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치 활동이 민간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2019년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비영리 활동에 관한 교육과 연구기능이 강한 성공회대가 구로구에 있지만 연계가 거의 없음. 시민사회영역에서 대학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있음을 확인
- 영등포구와 유사하게 전통적인 방식의 이슈 중심의 활동이 많은 지역으로 대중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역사성과 지역적 특징을 살린 비영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음

5) 금천구

- 돌봄, 교육, 문화예술 등의 의제로 활동하는 작은 네트워크는 많으나 각 네트워크 간 협력체계는 약하고 지역의 큰 이슈와 관련된 활동은 소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음
- 60대 이상의 거주자 비율이 높고, 청년인구가 서남권 자치구 중 2번째로 낮은 지역임에도 청춘빨당을 중심으로 청년 활동이 이루어져 청년 모임들이 등장하고 있는 지역임
- 관악구와 유사하게 문화예술 분야의 청년 모임들이 등장하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나타남
-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영역과 연계된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 금천구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동 단위 주민 모임이 마을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시민사회영역과의 연계나 협력은 미흡하며 동 단위 주민 모임과 연계되는 비영리사업이 필요

6) 동작구

- 동작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시민사회에서 구를 바라는 보는 입장에서도 신뢰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지역성과 역사성에 기반한 활동과 비영리 활동을 연계해 지역특화 비영리사업 모델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중앙대와 지역단체가 학기제 수업을 진행하거나 오픈 강좌를 진행했던 경험들이 있고, 민민협력사업에서 민관학 공동협력을 추진해보려는 시도도 있었기에 대학과 연계한 비영리 활동 특화 가능성이 다른 지

역보다 높음

7) 관악구

- 관악구는 평균 가구원 수(2.12명)가 가장 적은 반면, 1인 가구 거주 비율(43.9%)이 가장 높은 지역임
-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전체의 공통의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시민사회영역에서 협치 및 중간지원 조직을 지역과 연계해서 직접 진행해보자는 의견으로 사회적경제의 중간조직을 수탁 운영하면서 비영리 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1인 가구, 청년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청년 모임들이 발굴되고 있어 이 모임들을 비영리 영역과 연계하는 방식과 연계를 통한 신규 활동가발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나. 서남권 시민사회의 특성

1) 서남권 시민사회의 강점

-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협력을 경험해왔고, 풍부한 협업 경험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에 익숙하며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나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음
- 연대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민단체, 모임 등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영역별, 분야별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기초단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음
- 민민협력사업을 매개로 시민사회 간 연대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민관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 민간영역이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음
- 1인가구를 포함한 청년들과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비영리활동의 체계와 전문성을 지닌 단체와 오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다수 존재

〈표 26〉 서남권 워킹그룹 설문조사 결과요약 1

Q. 서남권 시민사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 마을넷을 기반으로 연대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해 온 시민단체 연대체가 존재함
- 단단한 연대의식과 멤버십을 가지고 있음
- 연대체를 기반으로 현재 활동하는 다양한 주민단체 및 모임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협력해 온 과정이 있음
- 시민단체간 협업 경험이 풍부함.
- 정기적 시민사회네트워크 모임이 있음
- 시민사회 협업과 네트워크 활동이 익숙함
-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로 소통이 잘 됨
- 시민사회 구성원들간 관계가 관찮은 편임

2. 분야별 네트워크

- 마을, 사회적경제, 복지 등 분야별 네트워크가 형성
- 기초(영역별)네트워크는 비교적 잘 조직됨
- 민민협력사업을 매개로 시민사회간 연대와 교류가 활성화.
- 영역별 네트워크가 활성화
- 민민협력체계가 구축돼 있고,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을 민민차원에서 진행

3. 시민단체의 역사성

- 회원과 단체가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을 이어 나가는 역사가 긴 단체 존재
- 회원의 직접적 활동이 풍부하며,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과정에 대한 경험도 풍부
-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민사회
- 풀뿌리 지역사회 운동의 역사가 오래되었음
- 20년 이상 시민사회 운동을 해 온 단체와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있음

4. 활동

- 애드보커시 형태의 활동에 강함
- 의제 및 주제별 활동이 다양하게 존재
- 1인가구를 포함한 청년, 문화예술활동이 꾸준히 증가
- 세월호 공동행동, 코로나19 응원꾸러미 제작 및 배포 등 공동행동 경험 풍부
- 노동의제 및 인권의제에 관심이 많고, 구정감시와 대안에 의견제시 활동이 많음
- 민관협치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

5. 활동가

- 시민사회를 형성했던 1세대 활동가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 오랜 경험을 가진 활동가들이 다수 있음
- 활동가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

6. 전문성, 역량

-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온 비영리단체가 다수 존재하며 체계와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음
- 비영리활동의 체계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단체들이 존재

2) 서남권 시민사회의 약점

- 시민사회 역사가 긴 경우, 조직중심의 활동성이 강하고 시민단체의 강성 이미지가 강함
- 오랜 역사로 인해 변화보다는 경험주의적 활동 경향이 있으며 강한 네트워크의 지향은 역으로 다른 시민사회에 대한 배타성으로 드러남
- 조직중심의 활동 성향과 단체 중심의 활동 성향으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지역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음
- 비영리활동의 전문성,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기능이 약하고 활동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 신규 활동가와 청년 활동가가 부족하며,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과 시스템이 부족
- 민관협치에서 관의 파트너로서의 관계 형성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며 관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음

<표 27> 서남권 워킹그룹 설문조사 결과요약 2

Q. 서남권 시민사회의 약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네트워크

- 영역 간 협업이나 사업의 밀도가 높지는 않음
- 강한 포괄네트워크를 지향하다보니 역으로 다른 시민사회에 대한 배타성이 있음
- 지역 활동을 다양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의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야 하는 앞으로의 과제가 있음
- 자치구에 따라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비교적 부족
- 다양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활동가들의 피로도가 높음.
- 단체나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연대의 경험이 적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 있음

2. 시민단체의 역사성

- 시민사회 역사에 비해 고전적인 의미에서 규정되는 시민단체가 현재는 많지 않음
- 시민단체의 강성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함
- 오랜 역사로 인한 경험주의적 활동방식

3. 활동

-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 조직중심의 활동 성향이 강함.
- 단체 주요 활동에만 집중되고 지역성 결여
- 주요 비영리 공익활동 그룹이 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없다 보니 정책과 활동이 따로 전개
- 다양한 층위의 시민들과 함께하지 못 함

4. 활동가

- 전반적으로 활동가가 부족
- 신입활동가, 청년 활동가의 부족
- 지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활동가(단체) 부족

5. 전문성, 역량

- 의제 제안 및 평가에는 강하나, 의제해결역량 부족
- 민관협치의 일 주체인 민간 역량 취약
- 비영리활동의 전문성 및 체계가 부족
-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연구기능이 약함.
- 비영리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6. 환경 및 지원

- 활동과 사업이 축적될 수 있는 인프라(사무국, 공간, 자산 등)가 부족
- 시민사회 활동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함
- 개별 단체들의 물적 기반이 약함
- 2030활동가들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방안이 부족

7. 협치

-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민관협력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음
- 관과 협력하는 단체(주민 모임) 또는 개인과만 협력하려는 성향이 있어 시민단체는 배제됨
- 민관협치의 경험부족(파트너로서의 관계형성이 미흡)
- 협치구조와 비판구조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다. 서남권NPO지원센터의 필요성

- 전통적 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민들의 성장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
- 자치구 시민사회의 고민과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거점과 역량 부족의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권역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의제들이 논의되고 정책화되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
- 교육, 연구 등의 기본교육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마련,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획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활동 지원은 자치구 단위에서는 한계점이 있어 권역 단위의 지원이 필요
- 서남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었다는 인식이 있기에 각 자치구의 활동을 기본으로 한 의제별 네트워크 활성화, 새로운 활동가 발굴 지원, 자치구를 초월하는 권역 단위의 연대 활동 등 활동가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가 필요
-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등에서 형성된 주민조직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공론화가 필요

<표 28> 서남권 워킹그룹 설문조사 결과요약 3

<p>Q. 서남권NPO지원센터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남권은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온 단체와 새로운 주민들로 새롭게 활동을 만들어 가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음. 전통적 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시민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서남권의 7개 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양하게 공존하며 창의적 의제 발굴과 의제 해결을 진행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발전을 도모하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임 - 생활권이 가까운 자치구들이 모여 넓은 단위의 의제를 모으고 자치구 내 시민사회의 고민과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모일 수 있는 거점이 없었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활동역량이 없었음. - 자치구 시민사회의 이슈와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권역 시민사회가 겪는 문제와 의제들이 논의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필요 - 중구에 있는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지리적인 한계로 직접적 지원이 어려움 - 교육, 연구 등 기본교육과 연대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의 설립이 필요
--

- 서울 서남권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자치구별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정책 마련과 실행,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획들이 필요함. 이를 통한 신, 구 활동가들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장이라는 과제를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내야 함
- 자치구 내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인근 타구 활동가들과 연대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지역 갈등으로 인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는 단체들은 센터를 통해 정보 공유가 가능
-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 지원을 위해 자치구마다 센터가 필요하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서남권에라도 생기는 것이 특성 파악에 도움이 될 듯함.
- 서남권은 그동안 다른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별로 없는 곳이었음. 시민사회 진영이 자치구 별로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NPO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의제별 네트워크 및 활동가들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교육, 연구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움
-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등에서 형성된 주민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함. 이에 적절한 지원과 공론화가 필요함
- 활동가에 있어서도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잘 연결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마련이 필요
- 지역 내에서 잘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비슷한 거주지와 환경을 가진 자치구들끼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
- 새로운 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과 지역 간 의제를 통한 연대 활동 거점 필요

IV.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타당성과 역할

1.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 가. 서울시 권역 간 시민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서남권 공익활동의 거점 조성
- 민선 7기 서울시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의 수요와 시민사회 내 협력체계가 마련된 권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NPO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서울시 전역의 시민사회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2018년 동북권NPO지원센터, 2020년 동남권NPO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자치구 간 협력과 생활권 단위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 중임
 - 서울시의 5대 권역 중 서남권은 가장 많은 7개 자치구가 속한 권역으로 서남권 시민사회가 NPO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활동지원과 네트워크 거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

7개 자치구 간 네트워크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한 공동활동의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 따라 거점과 허브의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악구 활동가 A

서남권은 지역 활동의 유형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환경은 자치구별로 차이가 커요. 자치구를 넘어 생활권이 가까운 자치구들이 모여 넓은 단위의 의제를 모으고 각 자치구의 문제나 문제해결 사례를 공유하면서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모일 수 있는 거점과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가도 없었어요. 서남권NPO지원센터가 이런 거점과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 양천구 활동가 A

- 나. 권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의제 발굴과 논의 활성화 지원으로 서남권만의 비영리 공익활동의 모델 발굴
- 서남권의 경우 환경과 문화재 보호, 노동운동, 빈민운동에서 출발해 생활형 주민운동과 지역 기반의 시민사회 활동으로 이어짐에 따라 지

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제 발굴을 통한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 활성화 모델 발굴 가능

- 영등포 경인로 일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구로2동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서울디지털산업단지과 온수산업단지 재생 지원 계획(2030 서울플랜) 등 지자체와 정부의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다양한 주민 모임이 형성되고 있어 이를 비영리 활동으로 연계해 서남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신규 단체, 신규 활동가 발굴 지원이 필요
- 서남권의 7개 자치구는 자치구 내, 자치구 간 네트워크 활동의 경험으로 인해 권역 단위의 의제 발굴과 시민사회 공동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

다. 새로운 형태의 활동가와 다양한 형태의 NPO 공익활동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시민사회 동력 발굴

- 서울시 청년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구 중 가장 높은 관악구(30.6%)와 동작구(25.6%)가 서남권에 있으며 서남권 청년인구 비율 평균은 24.6%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23.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인 가구 및 청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와 동시에 청년 개인 활동가, 생계와 활동을 이분화하여 활동하는 N잡러, 문화예술 기반의 청년 활동가 등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익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 기반의 활동과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 모임 등 생활 중심의 활동 등이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과 결합해 공익활동으로 전개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시민사회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등에서 형성된 주민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지역임
- 이에 적절한 지원과 공론화가 필요하며, 공통된 사회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분야 등에서 형성된 주민조직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임에 따라 이에 적절한 지원과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활동가에 있어서도 세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잘 연결되고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강서구 활동가 C

라. 서남권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권역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NPO지원센터

-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서남권 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개인과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마을 활동을 하는 초기 주민 모임 활동가들이 공익 활동가로서 지역에서 성장하고 그 모임 또한 비영리단체로 성장시키는 교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음
- 서남권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와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함
- 이는 서남권 시민사회의 새로운 활동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토대로 작용할 것임

마을 활동하는 초기의 주민 모임 활동이 비영리단체와 교류하고 공공의 활동가로서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런 교육이 부재한 관계로 비영리단체로서의 성장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에요. 시민사회와 주민 모임 활동을 비영리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과 교육, 연구, 지역 내 또는 지역간의 연대와 교류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동작구 활동가 A, FGI 중

교육, 연구 등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은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 관악구 활동가 B, FGI 중

서남권 NPO단체를 위한 교육, 연구 등 기본교육과 연대 활동을 지원할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동작구 활동가 A, FGI 중

마. 정부, 지자체의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촉진

-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과제를 제시

- 2018년과 2019년 진선미 의원과 권미혁 의원의 주도로 2건의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됨. 이에 2020년 시민사회 발전,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

<표 29>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목적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주요내용	-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공익활동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의 자율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정부의 책무 명시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도계획의 수립과 시행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 또한, 민선7기 서울시는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7대 영역의 66개의 핵심공약을 제시하였고, 이 중 민주주의특별시 영역의 3가지 핵심공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함

<표 30> 서울시 민선7기 공약 중 민주주의특별시 영역 핵심공약

핵심공약	세부사업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열린 파트너쉽 정부 서울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시 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시민 정책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 확대 및 활성화
개방형 협치 시정 3.0	선도적 민관 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서울시민회의’ 신설/운영
	협치역량 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	권역별 NPO 활동거점공간 및 지원센터 확대
	NPO 도서관 등 조성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자료: 민선7기 공약이행현황(2019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 2019년 서울시는 민주주의 활성화와 시민 권한 강화를 위한 민관합의제 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참여를 보다 제도화하고 체계화하고자 함
-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고 자치구 단위의 민관협치, 시민협력플랫폼 등의 정책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민관협치 파트너로서의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공익활동의 촉진이 필요

2.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

가. 서남권 시민사회 활동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발굴·연계

1) 서남권 시민사회 활동의 네트워크 거점

- 서울시 5대 권역 중 가장 많은 자치구가 속한 서남권은 그 면적이 타 권역과 비교해 광범위하므로 각 자치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이 필요함
- 서남권은 자치구별 시민사회 생성과정과 역사가 상이하지만, 분구가 이루어지거나 인접 구의 경우에는 유사성이 발견되기도 하기에 자치구별 특성에 기반한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이를 연결하는 7개 자치구의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구로, 금천, 영등포 등은 대규모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에 의해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생활형 주민운동, 의제 운동으로 변화하여온 특징을 볼 수 있으며, 관악, 동작은 빈민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80년대 이전부터 생활형, 주민 참여형 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현재까지 지속되었어요. 강서, 양천의 활동역사를 들여다보면 우장산살리기 운동, 고압선지중화사업, 백제박물관건립 운동 등 환경, 문화유적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이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이 지역 차원에서 창립되기도 했죠. - 영등포구 활동가 A, FGI 중

7개구로 이루어진 서남권은 각 자치구 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어 창의적 의제 발굴과 의제 해결을 시민들의 참여에 기반한 활동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 관악구 활동가 A, FGI 중

- 또한 각 자치구 활동을 기반으로 서남1권(강서구, 양천구), 서남2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권(관악구, 동작구)으로 구분되는 소권

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서남권 전체를 통합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센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

2) 공익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연계

- 권역 내 위치한 정부 기관과 마을자치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 대학, 기업 사회공헌 부문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공익자원을 NPO 활동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서남권에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종합형 시행 대학인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와 시민사회 분야에 강점을 지닌 대학인 성공회대가 위치하고 있음
- 대학의 자원과 교육, 연구 전문역량의 연계가 중요한 지역으로 활동가 인터뷰에서도 권역 NPO지원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대학과 시민사회를 연결할 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음

대학과 지역을 연결한다는 정도는 다 합의가 되지만, 어떻게 연결할 건가가 권역NPO 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봐요. - 동작구 활동가 A, 워크숍 중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역할 중 하나가 지역과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인데 그 일을 직접 상근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대학 연결활동가를 공모하여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관악구 활동가 C, FGI 중

- 서남권의 일부 자치구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시민사회영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NPO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자원연계 활동이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서남권에는 1개의 국가산업단지과 2개의 일반산업단지 총 3개의 산업단지가 있어 각양각색의 산업기반과 자원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이를 NPO 활동과 연계하는 전략이 중요함
- 권역 내 다양한 기관, 기업, 중간지원조직들과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NPO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자치구 단위의 시민사회단체나 네트워크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권역 NPO지원센터에서 담당해야 함

나. 서남권 NPO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1) 서남권 NPO 활동 지원

- 2010년 이후 서남권 NPO 단체들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서남권 시민사회 역시 동남권, 동북권의 시민사회와 유사하게 공간과 정보의 부족, 교육의 부재, 네트워크 활동 지원의 미흡 등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이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욕구가 높았음
- 이에 다양한 권역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계를 통한 NPO 활동지원과 더불어 자치구와 권역 단위의 단체와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활동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특히, 서남권 기초조사 자료와 활동가 인터뷰에 따르면 단체, 활동가,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서남권 NPO 활동 역량 강화

- 서남권의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중앙부처 329개, 서울시 567개로 총 896개이며, 20년 이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단체와 10년 내외의 신규 단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신규 활동단체의 74%가 2010년 이후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임의단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임의단체의 비영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 단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또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으로 새롭게 공익활동에 진입하는 모임이나 임의단체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단체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력을 확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 즉, 기존 단체 및 활동가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주체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함.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확산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체와 활동가 중심의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동지원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함

다. 서남권 NPO 특성화를 통한 기반조성 및 공익활동 촉진

1) 서남권 NPO 활동 기반조성

- 앞서 언급한 NPO 활동 지원이 프로그램 기반 접근이었다면 NPO 활동 기반조성은 공간 부족에 따른 공유공간의 제공, 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공익활동비 지원, 지역공통 의제 발굴 등과 같은 권역과 자치구 단위의 정책적 직접 지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함
- 이는 NPO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역할로 이에 대한 활동가들과 단체들의 요구는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2) 서남권 특성에 기반한 공익활동 촉진

- 자치구별 특성 및 소권역 특성에 기반한 공익활동 촉진의 역할을 권역 단위 허브에서 진행해야 효과적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활동이 지속 가능함

<표 31> 서남권 소권역별 특성

소권역	특징
강서구, 양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문화유적에 대한 개선 요구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활동이 시작 · 강서구와 양천구는 분구의 특징이 반영된 지역으로 2개의 자치구 간 활동 연계성이 강함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노동 운동에서 출발해 주민운동, 의제 운동으로 변화 · 금천구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동 단위 주민 모임의 시민사회영역과의 연계가 중요
관악구, 동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민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으로 8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어드보커시 활동 중심 · 대학과 비영리 영역과의 자원연계가 중요한 지역으로 1인 가구와 청년 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

3. 서남권NPO지원센터의 기능

〈표 32〉 서남권NPO지원센터 기능

1	서남권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2	서남권 NPO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3	서남권 NPO 활동 기반 조성	4	서남권 특성화 사업

가. 서남권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 자치구별 특성에 기반한 활동 지원을 바탕으로 이를 연결하는 7개 자치구 네트워크 허브와 소권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권역 내 사회적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연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동반관계를 구축하여 권역 차원에서 각 자치구 단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자원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나. 서남권 NPO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1) 활동지원

- 다양한 권역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조사와 연계를 통한 NPO 활동지원과 더불어 자치구와 권역 단위의 단체와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 수행

2) 단체 역량 강화

- 2010년 이후 서남권에 새롭게 등장하는 비영리 임의단체와 기존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차별화된 역량 강화와 연계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 기존 시민사회 단체 대상으로는 조직 운영, 지역 의제 발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기반의 공익활동 확산의 선도적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기능임
- 반면에 신규 출연 단체의 경우,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제고 등의 육성 지원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익활동 영역에서 튼튼한 활동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자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함

3) 활동가 역량 강화

- 각 자치구와 권역의 시민사회와 자원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자치구 내 공익활동 자원의 연결, 의제발굴과 실행 등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동 기반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또한, 활동가가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의제화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활동가의 소진 예방과 지속가능한 활동성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기능 역시 추가되어야 함

4) 민민협력 및 협치 역량 강화

- 시민협력플랫폼과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민민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자치구와 부재하거나 미진한 자치구가 혼재되어 있어 상호 경험의 교류가 필요함
- 서남권의 권역 특성을 고려해 3개 소권역 단위별 비영리 의제를 특화하여 활동과 사업을 중심으로 소권역별 민민협력 역량을 강화

다. 서남권 NPO 활동 기반 조성

1) 서남권 NPO의 활동 공유기반 마련

- 권역 내 NPO 단체들이 상호 교류하고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치구를 넘어 권역별로 NPO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공유기반을 조성
- 단순한 소통의 공간이 아닌 협업공간 지원을 목표로 하며, 신규 단체의 경우에는 현실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제공의 기능도 고려해야 함

2) 지역 연구 및 의제 개발

- NPO 활동의 영향을 확산하고 시민사회 활동의 사회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통의제 발굴과 개발이 중요함
- 그러나 권역 단위의 의제 발굴은 자치구나 소권역의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서남권NPO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전체를 관통하는 통합적인 범위의 지역 연구와 의제 개발의 기반조성 기능이 필요함

3) 홍보 및 아카이빙

- 자치구 기반의 시민사회 정보와 활동 공유 및 다양한 활동 경험이 교류될 수 있는 공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과 아카이빙을 권역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NPO 활동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채널이 고민되어야 하며, 지역 내 NPO 단체와 일반 시민 및 타 권역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
- 다양한 층위의 접근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홍보와 정보제공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목적성에 맞는 권역 단위 홍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

라. 서남권 특성화 사업

1)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

- 관악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의 경우 잠재적 청년 활동가와 신규 활동가 발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N잡러, 1인활동가, 문화예술 기반의 청년 활동가 등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서남권 전체의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해 권역 차원에서 청년 활동가와 신규 활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함

2) 주민 모임, 임의단체 등과 연계한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서 주민 모임, 문화예술 기반의 청년 모임, 지역적 특성과 결합한 임의단체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나타나고 있음
- 공익활동 초기의 이러한 모임들을 비영리 영역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비영리단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

3) 대학연계 공익활동 발굴

- 구로구에는 시민사회 분야가 특성화된 성공회대학교, 관악구와 동작구에는 대규모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대학교, 중랑대학교, 송

- 실대학교 등이 있으나 대학과 시민사회의 접점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의 전문역량과 시민사회의 활동력을 결합한 공익활동 발굴을 위해 서남권NPO지원센터가 중간매개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
- 4)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 관련 공익활동 발굴
-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이와 관련된 비영리 활동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공익활동의 발굴이 필요

V.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전략

1.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개요

〈표 33〉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개요

센터 목표	서남권 NPO 공익활동 촉진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및 지역 상생
핵심키워드	1. 권역 허브 2. 역량 강화 3. 지역 밀착형 지원 4. 생태계 조성
센터 역할	1. 서남권 시민사회 활동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발굴·연계 2. 서남권 NPO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3. 서남권 NPO 특성화를 통한 기반조성과 공익활동 촉진
센터 기능	1. 서남권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연계 2. 서남권 NPO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3. 서남권 NPO 활동 기반 조성 4. 서남권 특성화 사업
센터사업 전략	1. 서남권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가. 소권역별·소권역간 네트워크 강화 나. 지역 자원 및 유관 기관 연계 2. 서남권 NPO 역량 강화 가. 단체 역량 강화 나. 활동가 역량 강화 다. 민민협력 및 협치 역량 강화 3. 서남권 NPO 활동 기반조성 가. 서남권 NPO의 활동 공유기반 마련 나. 권역 차원의 지역 연구 및 의제 개발 다. 홍보 및 아카이빙 4. 서남권 특성화 사업 가. 서남권 NPO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 나. 주민 모임, 임의단체 등과 연계한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다. 대학연계 공익활동 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 관련 공익활동

2. 서남권NPO지원센터 세부 운영전략

가. 서남권 NPO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 연계

1) 소권역별 · 소권역간 네트워크 강화

- 서남1권(강서구, 양천구), 서남2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권(관악구, 동작구)으로 구분되는 소권역별 비영리 의제와 공통 사업을 발굴 · 지원하여 소권역 단위의 비영리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

<표 34> 소권역별 비영리 의제에 따른 공통 사업

구분	내용
서남1권 (강서구, 양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구와 양천구는 분구 및 자치구 간 활동영역의 연계성이 강한 지역임에 따라 서남1권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 주거지와 생활협동조합 중심으로 활성화된 주민모임과 비영리 영역과의 연계 욕구를 충족하는 비영리단체 발굴 사업 추진 · 결혼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서남2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원연계 방식 사례 공유
서남2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대중사업 활성화 ·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비영리영역을 연계하는 자원연계 사업 추진 · 서남3권 사례공유를 통한 성공회대와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서남3권 (관악구, 동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과 비영리 영역과의 자원연계가 중요한 지역으로 서울대, 중앙대, 숭실대와의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 1인 가구와 청년 유입이 두드러지는 특성에 따른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중점 시행

- 소권역별 시민사회의 장단점을 고려한 소권역 간 협업 및 사업 연계를 추진하여 서남권 시민사회 역량 및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표 35> 설문조사, FGI를 통한 소권역 간 비교

구분	시민사회 네트워크	NPO 활동가 역량	NPO 전문성	민관협치 (시민협력플랫폼)
서남 1권	강	중	약	강
서남 2권	중	강	강	약
서남 3권	강	강	중	중

2) 지역 자원 및 유관 기관 연계

-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남권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자치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여타 중간지원조직들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과의 사업 연계 및 협업을 통해 NPO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각각의 중간지원조직들은 설립근거에 따라 활동 내용과 지원의 범위가 상이하지만 지역 비영리 단체 및 활동가들과의 중첩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권역NPO지원센터의 명확한 사업영역과 여타 중간지원조직과의 차별성을 고려해야 함

<표 36>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근거 및 목적

구분	설립 근거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이 목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중간지원조직들 간 상호 연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활동내용에 따라 비영리영역과 연결되는 사업의 경우 연계 및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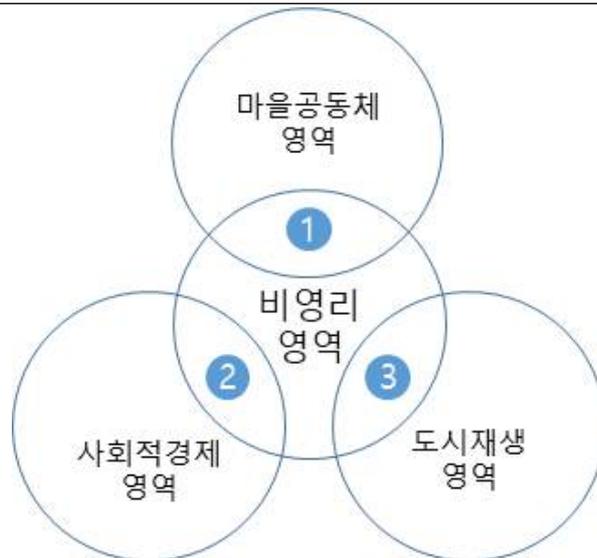
<표 37>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내용

구분	활동 내용
서울시NPO지원센터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시민공익활동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시민공익활동을 실행하거나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 시민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p>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p>	<p>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지원 * 주민자치공동체인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p>
<p>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p>	<p>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활동 지원</p>
<p>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p>	<p>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재창조를 기본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활동 * 도시재생 관련 활동 지원</p>

- 서남권NPO지원센터는 각 자치구별 여타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비영리 영역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모임, 단체 및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할 수 있어야 함

<그림 12> 중간지원조직 연계 영역 간 지원 전략



- ①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민모임 및 활동가들의 공익 활동 및 비영리 단체 설립·운영 지원

- ② 사회적 협동조합 등 비영리 법인의 지역 활동 지원 및 조합원들의 공익활동 및 비영리 단체 설립·운영 지원
- ③ 도시재생을 위한 자발적 주민협의체, 마을관리단체 등의 비영리 사업 및 비영리 단체 설립·운영 지원

나. 서남권 NPO 역량 강화

1) 단체 대상의 역량 강화

- 단체 역량 강화는 동북권과 동남권의 사례와 서남권 FGI를 통해 공통으로 도출된 지원 필요사항임에 따라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 단체의 요구에 따른 분야별 의제 발굴 전문성 강화, 조직 운영 및 행정 실무 역량 배양 등의 기본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단체현황별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표 38> 단체현황별 기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조직 운영 및 행정 실무

구분	대상 및 내용 예시
초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설립 초기 단체나 단체 실무자 등 관심이 있는 누구나 · 내용: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노무의 기초, 비영리 행정 실무의 기초, 비영리 회계의 첫걸음 등 비영리 영역에 대한 개론
중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인 운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거나 일반 행정 관련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단체나 단체 실무자나 중간관리자 · 내용: 조직 문제진단, 비영리 회계/세무 현장 실무편 등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과정
고급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최고경영자 과정으로 단체 운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이 목표인 단체나 단체대표자 대상 · 내용: 비영리 경영 전략, 비영리마케팅, 비영리 인사조직 등에 대한 전문 과정

- 단체별 공익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단체와 신규 단체에 대한 차별화된 “단체별 활동단계 맞춤형 역량 강화” 실행

<표 39> 단체별 활동단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활동단계	대상 및 내용 예시
시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공익활동 아이디어 또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있는 비영리 임의단체 또는 모임 내용: 비영리 활동에 대한 이해, 비영리 활동 모델의 구체화 등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공익활동 모델의 목표와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정교화하고자 하는 설립 1년~3년 이내의 단체 내용: 공익활동 목표 설정, 방향성 확인, 활동 모델의 정교화 등
도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구체적인 활동 목표에 따라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로 활동과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설립 3년~7년 이내의 단체 내용: 자원연계, 단체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새로운 활동 모델의 발굴 등

2) 활동가 대상의 역량 강화

○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 각 자치구와 권역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자치구 내 공익활동 자원의 연결, 의제 발굴과 실행 등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해 수준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동가가 스스로 개인 활동 기반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40> 활동가 수준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시: 개인 수준에 부합하는 과정

구분	과정 예시	
퍼실리테이션	기초	· 비영리 활동에서의 퍼실리테이션, 퍼실리테이션의 기초 등
	심화	· 퍼실리테이션의 실무, 갈등 조정 방법론, 의제 발굴 실무 등
	전문가	· 퍼실리테이터 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가 코스
비영리 홍보 마케팅	기초	· 비영리 홍보 마케팅 기초,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기초 등
	심화1	· 홍보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포토샵 실무 심화 과정
	심화2	· 홍보전략 수립, SNS 및 유튜브의 활용, 홍보채널 활용 등

-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의 경우 찾아가는 방식의 진행과 서남권NPO지원센터에서의 집체교육 등을 병행하여 교육의 효과를 제고해야 함. 특히 찾아가는 방식의 교육은 자치구별 교육, 소권역별 교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활동가 자기 주도 역량 강화
 - NPO 활동가 스스로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의제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 연수와 활동가 주도의 독립연구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당 과정 자체가 자체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함

<표 41> 활동가 자기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

구분	과정 예시	
활동가 독립연구	지역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현안발굴, 자원발굴, 지역 전문가 풀 조사 등 활동가 스스로 지역을 연구하고 개인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 주도 연구 · 연구 기간: 3개월~6개월 · 지원내용: 기간 및 주제에 따라 연구비 지원
	사례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서남권에 적용할 수 있는 공익활동 모델 발굴 · 연구 기간: 3개월 ~ 6개월 · 지원내용: 기간 및 주제, 국내외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

- 활동가의 자기 주도 역량 강화는 서남권NPO지원센터가 자치구 내 여러 사각지대의 현안들을 찾아내고 권역 차원에서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기초토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활동가 활동 동력 역량 강화
 - 서남권 활동가 역시 네트워크 활동,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복잡한 공익활동, 갈등의 중재 등으로 인해 다양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
 - 활동가의 소진 예방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민간 NPO나 광역과 권역NPO지원센터 등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표 42> 민간 NPO 및 NPO지원센터의 지원 사례

구분	내용
아름다운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공익활동가 지원 사업 · 사업목표: 활동가 소진 예방 및 활동과 삶의 조화 · 지원대상: 쉼을 위한 국내외 여행 및 취미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시민사회, 풀뿌리 단체 3년 이상 재직 중인 상근활동가 개인 또는 2인 이상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00만원, 1팀당 최대 600만원 지원
<p>동북권 NPO지원 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1박 2일 간의 힐링 프로젝트 진행 · 사업목표: 활동가의 온전한 삶과 재충전 지원 · 내용: 동북권 NPO활동가를 대상으로 활동가 소진 예방과 활동성 보장을 위한 재충전 워크숍 진행 · 대상: 동북 5구 NPO활동가(4-5인 팀 구성 후 신청)

3) 민민협력 및 협치 역량 강화

- 서울시는 시정 주도의 하향식 협치 모델을 탈피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협치모델을 확립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시민협력플랫폼과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서남권의 경우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양천구가 시민협력플랫폼과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민민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영등포구와 금천구는 해당 사업이 부재하거나 미진함
- 상호 활동 경험의 교류를 통해 서남권 민민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론장, 공유네트워킹 등의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함
- 또한, 서남권의 권역 특성을 고려해 3개 소권역 단위별 비영리 의제를 특화한 활동과 사업을 중심으로 소권역별 민민협력 역량 역시 강화해야 함

<표 43> 소권역 특성을 반영한 비영리 의제 예시

구분	내용
서남1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양천 활동가 역량강화 TF · 공유자산 및 시민자산화
서남2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대중사업 프로젝트 기획 TF · 소권역 공통의제 발굴 연구
서남3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학 협력 사업 발굴 TF · 청년활동가 발굴 사업 기획

- 시민사회 위상 및 역할 강화와 더불어 민관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주요 비영리 단체 및 활동가들의 협치 전문성 제고 및 민관 협력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함

- 이에, 서남권NPO지원센터는 지역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서남권 비영리 활동가 대상 협치역량 강화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함

<표 44> 협치역량 강화 단계별 교육 예시

구분	과정 예시
기초1	· 시민사회와 민관협치의 이해
기초2	· 시민사회와 행정의 협치 관점
심화1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심화2	· 협치 참여주체로서의 활동방안
심화3	· 시민사회협력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다. 서남권 NPO 활동 기반 조성

1) 서남권 NPO의 활동 공유기반 마련

- 의제, 분야별로 자치구 내 NPO들이 교류하고 활동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치구를 넘어 권역 단위 NPO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물리적 환경 기반조성
 - 공익활동 초기 시작모임이나 단체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는 물리적 기반조성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의 공간지원 사업이 중요함

<표 45> 동남권NPO지원센터와 동북권NPO지원센터의 공간지원 방식

구분	내용
동남권 NPO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10년 이내 NPO 및 비영리단체 준비 모임에 대해 공간지원 · 업무 관련 기본 시설과(개인 사물함, 공용 프린터 및 복사기 등) 협업공간 제공 · 입주단체 간 네트워킹 지원
동북권 NPO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 모두에게 라운지, 회의실, 교육장 공간 대관

- 타 권역 센터의 공간지원 방식을 참고하되 서남권 지역사회 NPO의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단순한 소통이 아닌 협업 지원을 목표로 물리적 공간을 구성해야 함

2) 권역 차원의 지역 연구 및 의제 개발

- NPO 활동이 자치구에 매몰되어 고립되지 않고 활동의 영향을 확산하고 사회적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권역의 공통의제 발굴과 연구가 중요함
- 권역 공통의제와 지역 연구는 자치구나 소권역의 수준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서남권 전체를 관통하는 지역 연구 및 의제 개발을 서남권 NPO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함

자치구를 넘어 생활권이 가까운 자치구들이 모여 넓은 단위의 의제를 모으고 자치구에서의 고민이나 사례를 듣기도 하면서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모일 수 있는 거점이 없었고 역어널 활동가도 없었기 때문에 시도는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 양천구 활동가 C

저는 서남권 전체 문제로 서부간선도로 관련 개발 같은 이슈를 말하고 싶은데요. 지역에 걸쳐 있거나 안전, 환경 문제와 같이 한 개의 자치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 차원의 시민모니터링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영등포구 활동가 B

- 이에 권역 차원의 지역 연구를 위한 담당 활동가를 배정하고, 자치구별 현황 파악을 통해 발굴된 공통의제의 공동해결 과정을 통해 개별 자치구 활동이 서남권 전체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함

3) 홍보 및 아카이빙 전략

-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과 활동
 - 서남권 각 자치구 기반의 시민사회 정보와 활동 소식이 상호 원활히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희망하는 활동가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One Stop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자치구 내 지역 NPO 활동에 필요한 여러 기초 자료들의 중복을 방지하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또한, 자치구와 소권역별 아카이빙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 필요

<표 46> 아카이빙 운영방식 예시

구분	내용
직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차원에서 자원조사, 직접사업 등에 대한 아카이빙은 직접 진행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며 정보전달에 혼란이 없음 • 자원조사나 연구조사자료의 아카이빙 외에 공유공간, 연계자원 등 자치구를 초월하는 권역 단위 조사를 통해 NPO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수집과 연계를 목적으로 함
사업회를 통한 간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서남권의 경우 자치구 별 지역 밀착형 아카이빙을 직접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동북권NPO지원센터의 아카이빙 지원 사업과 같이 각 자치구의 아카이빙 활동 지원을 통해 개별 자치구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음

○ NPO 활동 결과의 확산

- 2020년 오픈서베이의 소셜미디어 및 검색 포털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밴드, 유튜브, 페이스북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가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3> 성별, 연령별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

글/사진/영상/댓글 업로드 소셜미디어



[Base: 최근 1개월 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N=610, 단위: %, 복수응답]
 * 1% 미만 데이터의 경우 제시하지 않음 / * 하늘색 음영: 평균 대비 +5%P 이상인 데이터

자료: 오픈서베이, 소셜미디어 및 검색 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0

- 인스타그램의 경우 10대~30대 사용률이 1위로 나타났고, 40대의 경우 네이버블로그, 50대의 경우 밴드로 나타남에 따라 효과적인 활동 결과의 확산과 소통을 위해 주요 사용자 현황과 활용 용도에 맞게 채널을 활용해야 함
- 밴드의 경우에는 폐쇄성이 강해 정보 아카이빙 및 홍보 용도보다는 활동가 간 네트워킹, 내부 아카이빙과 내부 활동 공유에 적합함에 따라 아래의 채널을 기본으로 NPO 활동을 아카이빙하고 확산한다면 효과적일 것임

<표 47> 플랫폼별 활용도와 주타겟층

구분	활용용도	주타겟층
홈페이지	· 아카이빙 및 정보전달의 기본 플랫폼	전체 연령대
블로그	· 접근성이 쉬운 플랫폼으로 소식지 형태의 소식 전달용으로 활용	20대~50대
인스타그램	· 사진 및 카드 뉴스 위주의 정보전달 및 청년 그룹 대상의 홍보용	10대~30대
유튜브	· 활동 과 교육 영상 중심의 아카이빙과 홍보용	전체 연령대

라. 서남권 특성화 사업

- 자치구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별 특성과 소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익활동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표 48> 서남권 자치구 특성

구분	내용
강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단체들과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 양천구와의 활동 연계성이 강하고, 양 자치구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마곡지구로 인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특징이 공존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이나 마을 자치, 사회적경제 영역과 시민사회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성과 생활협동조합 활동으로 형성된 주민 모임을 비영리 영역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 4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계성이 약하고, 청년 신규 활동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지역
양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천구는 강서구에서 분구되어 강서구 시민사회와 교류가 활발한 지역 · 25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양천마을을 중심으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협력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음 · 양천구의 청년 활동공간인 무중력지대에는 20~30대 청년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연계는 낮은 수준임 · 중간지원조직 활동에서 형성된 주민 모임과 청년 모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연결하기에 가장 특화된 지역이며 그에 대한 욕구가 높음
구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포괄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협력플랫폼이 잘 형성되어 있고 2019년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 전통적인 방식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 이 단체들이 대중사업과 고유 사업을 통한 비영리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비영리 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구기능이 특화된 성공회대가 구로구에 있지만 대학연계는 미비함 ·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영리 활동을 고려해야 함
금천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구가 서남권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청춘벨딩을 중심으로 청년 활동이 이루어져 다양한 청년 모임이 등장 · 주민자치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민사회영역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어 주민 모임 중 NPO 활동에 관심이 있는 곳을 비영리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가 필요 · 영등포구에 이어 2번째로 다문화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에 따라 다문화 관련 비영리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역
영등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시민사회영역이 발달한 지역으로, 노동, 인권, 장애 등의 제형 활동과 어드보커시 활동이 활발함 · 목요밥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나 제도화된 모임이라기 보다는 친목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자유로운 의제 공유공간의 성격이 강함 · 단단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나 협치 파트너로 인식되지 않은

	<p>경향이 있고 시민들과 함께할 사업이 필요한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구와 외국인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와 관련된 활동 역시 고민이 필요한 지역
관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민하고 시민사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전체의 공통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시민사회영역에서 협치 및 중간지원조직을 지역과 연계해서 직접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중간조직을 수탁 운영하면서 비영리 영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평균 가구원 수가 가장 적은 구임. 반면 1인 가구가 43.9%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비영리 영역에서의 청년 활동가는 부족한 실정임 · 문화예술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비영리조직이 확장되고 있음. 마을에서 활동하는 임의단체 그룹이 시민사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필요
동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사례가 최근에 있어 공통의제 발굴과 공론화에 대한 NPO지원센터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 ·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비영리 활동에 강점이 있는 지역 · 최근에는 구청과의 민관협치, 대학과의 연계 등 민관학의 관계가 기존보다 나아지고 있는 지역으로 민관학협의체가 형성되어 정례화되고 있음 · 중앙대와 송실대가 자리 잡고 있고 특히 중앙대와 지역사회단체가 연계한 강좌를 진행하거나 공동협력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 대학과 연계한 비영리 활동 특화의 가능성이 큰 지역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남권NPO지원센터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중점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9〉 서남권NPO지원센터 중점 전략

1	서남권 NPO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
2	주민 모임, 임의단체 등과 연계한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3	대학연계 공익활동
4	외국인 및 다문화가구 관련 공익활동

1) 서남권 NPO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 전략

-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은 서남권 7개 자치구의 공통된 문제로 나타남. 특히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의 경우 잠재적 청년 활동가와 신규 활동가를 발굴할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청년들이 NPO 활동가로 활동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영역에서 의미 있는 일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함

저는 뭘 받고 활동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하는 일이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하고 있어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되게 좋거든요. 돈을 적게 주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시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나 다른 일을 병행하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강서구 청년 활동가 A

- N잡러, 1인 활동가, 문화예술 기반의 청년 활동가 등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한 흐름에 맞추어 개별 단체의 활동가 발굴 이전에 서남권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청년 활동가와 공익활동가를 발굴한다는 목적으로 권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청년 활동가 및 신규 활동가 발굴을 위한 유사 사례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서남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활동가 발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아래의 프로그램들의 핵심은 청년과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활동가들과의 교육훈련, 멘토링, 공동 워크숍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가의 삶과 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것임

<그림 14> 청년허브 ‘사회혁신청년 활동가’ 양성사업



- 일을 찾는 청년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 분야 현장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일경험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진로 설계와 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적경제조직, NGO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참여자들을 파견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소셜벤처나 공유공간, 콘텐츠 기업 쪽으로 활동이 진행 중
- 지원내용: 사회혁신 청년 활동가 인건비, 교육훈련

<그림 15> 동대문구 민민협력플랫폼 ‘공익활동가 발굴프로젝트’



분야 및 내용		활동 기간
자유형	· 사회문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자유주제에 따른 공익활동 제안형	6월~8월
주제형	· 영상활동가: 민민협력플랫폼 활동 촬영 및 영상을 통한 공익활동	교육 및 과제수행
	· 시민사회지원 활동가: 민주 시민교육, 시민사회 협의체 및 공익활동 지원조례 추진 활동 지원	프로젝트 수행

- 3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참여소득 지급
- 소정의 프로젝트 실행비, 멘토링 및 프로젝트 실행 지원

<그림 16> 동남권NPO지원센터 <예비활동가 NPO학교>



예비활동가 NPO학교

시민사회를 위한 준비 과정
NPO 활동가 네 자립의 길잡이

일정	구분	주제	강사
7/1(수) 13:00 ~ 18:00 (5H)	OPENING	개강식	
	[NPO의 이해]	시민사회의 이해	박성수 (한양대학교 LINC+사업단 교수)
여성과 NGO는 처음이지?		김난희 (스위치온 대표)	
7/8(수) 14:00 ~ 18:00 (4H)	[사회적 가치의 이해]	2050 - 한 "지구"적 시험	김소영 (성대골에너지협마을 대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서진석 (SK행복나눔재단 SI사업그룹장)
7/15(수) 14:00 ~ 16:00 (2H)	워크숍	NPO 청년활동가의 일상 : 활동가와의 대화	
		7/16(목) ~ 7/28(화) *월(멘토3 + 참가자 6) 자유 일정	NPO 활동가 멘토와 함께하는 "내가 만드는 NPO" 프로젝트 기획 * NPO 탐방 (문헌 조사, 단체 방문, 활동가 인터뷰 등)
7/29(수) 14:00 ~ 17:00 (3H)	CLOSING	프로젝트 "내가 만드는 NPO" 발표 종강	

- NPO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NPO이야기, 활동가가 되면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 NPO의 이해, 워크숍 등으로 구성된 코스

2) 주민 모임, 임의단체 등과 연계한 비영리스타트업 발굴 전략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 모임, 문화예술 기반의 청년 모임, 생활 중심형 활동과 자치구의 지역적 특성이 결합한 임의단체 등 새로운 형태의 조직들이 출현하고 있음
- 특히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관악구에서 이러한 조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음. 이들을 비영리단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중요함
- 공익활동 초기의 모임들을 비영리 영역과 연결하고 확산하기 위해 공익활동 실험 지원, 프로젝트 경험 제공, 조직의 성장 지원을 전략 방향으로 수립해야 함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광역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을 중심으로 타 영역의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서남권만의 비영리스타트업 발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비영리스타트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비영리 공익활동과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서남권NPO지원센터만의 방향성을 확고히 해야 함

-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스타트업>

- 공익활동 초기 단계 팀의 역량 강화, 네트워크 확장과 홍보 지원을

통해 비영리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며 공익목적의 사업 아이디어와 비영리 운영구조를 실험해보고 싶은 2인 이상의 팀이나 공익활동 조직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하고자 하는 설립(등록) 2년 이하의 비영리단체를 지원

<그림 17>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스타트업’ 내용

비영리 스타트업
4기 모집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공익활동 초기단계 팀의 역량강화 네트워크 확장과 홍보 지원을 통해 비영리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코칭&멘토링**: 비영리스타트업 창업 전문가 활동주제 전문가 1:1 연계
- 네트워킹**: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네트워킹 포럼 NPO 파트너 매어 기획부스 참가
- 지원금**: 사업개발 및 활동지원금 500~800만원
- 공간**: 팀당 2~3인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회의실
- 홍보**: 팀별 콘텐츠 제작 및 센터 채널을 통한 홍보

- 동북권NPO지원센터 <공익의 힘 지원 사업>

- 풀뿌리 주민 모임과 비영리단체를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여 동북권 시민사회 활성화와 새로운 공공성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 공익활동가 3인 이상의 모임과 단체 대상의 공익활동 실험실과 임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유목적사업 프로젝트로 구성

<그림 18> 동북권NPO지원센터 ‘공익의 힘 지원 사업’ 내용

공익활동 실험실

이슈 발굴부터 공익활동 실행까지 분야와 실행방식에 대한 제한 없이 당신의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동북권의 새로운 공공성이 창출되길 기대합니다.

- 신청자격**: 동북권 공익활동가 3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 지원금액**: 200만 원 이내

고유목적사업 프로젝트

단체를 만든 첫 마음들이 하고자 했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합니다.
동북권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 신청자격**: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
- 지원금액**: 300만 원 이내

-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 비영리 영역에 출연하는 다양한 주체의 새로운 실험을 지원하고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도움으로써, 비영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는 새로운 비영리조직을 지원하고자 함
- 비영리스타트업의 정의: 새롭게 시작하는 비영리조직을 의미하는 동

시에 일반적인 스타트업과 같이 과감한 실험과 자유로운 변화가 가능한 조직을 의미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비영리적인 방식과 마인드를 고민하고 또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실험할 수 있는 조직을 뜻함

<그림 19>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 내용



3) 대학연계 공익활동 전략

- 서남권의 경우 시민사회 분야에 강점을 지닌 성공회대학교와 대구모 지역연계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가 있으며 중소규모의 연계사업을 추진 중인 3개 대학이 있음
- 대학과 시민사회 모두 협업의 욕구는 있으나 협력의 지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양측 모두 적극적인 협업 시도는 하지 않는 실정임
- 동북권NPO지원센터의 사례를 보면, 센터가 대학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을포럼 형태의 협력단계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그림 20> 대학연계 사례: 사회혁신마을포럼

The poster for '사회혁신마을포럼' (Social Innovation Village Forum) features the title '사회혁신마을포럼' and the subtitle '강박을 중심으로'. It lists the dates '2018.12.6 - 12.7' and the location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컨벤션홀'. It also includes two dates: '2018.12.6 (목) 오후 2시' and '2018.12.7 (금) 오후 3시'. The text on the poster describes the forum's purpose: '오랜 기간 진행 중인 사회혁신마을공화국을 찾는다' and '마을의 상생,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낸다'.

- 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는 대학-마을-시민사회 협력 프로젝트로 한신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한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
- 마을공동체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마을 영역에서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포럼을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
- 대학연계의 사례임과 동시에 마을 영역에서의 공익활동 방향까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

- 활동가들은 구체적으로 외국인 대상 활동이 어떻게 NPO 활동과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큰 상황임
-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의 경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서남권NPO지원센터간의 협업을 통해 권역 내 NPO단체들과의 자원연계를 위한 정보교류, 공동활동의 기획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강서구와 양천구의 경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의 비율이 서울시에서 높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접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3. 서남권NPO지원센터 일반적 입지 조건

가. 타 권역NPO지원센터 입지 조건 일반사항

- 동북2권의 4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동북권NPO지원센터는 도봉구, 동남권 4개 자치구를 지원하는 동남권NPO지원센터의 경우 송파구에 위치

<표 51> 권역NPO지원센터 위치 및 공간면적

동북권NPO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면적 284.3㎡) * 동북권 세대융합형복합 시설 설립 후 해당 시설의 400㎡ 공간으로 이전 예정
동남권NPO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 3층(면적 386.55㎡)

-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2개 이상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있고 건물 내 주차공간의 사용이 가능

<그림 22> 권역NPO지원센터 대중교통 접근성



나.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일반적 입지 조건

- 타 권역NPO지원센터의 일반현황을 토대로 서남권NPO지원센터의 위치 선정 시 아래와 같은 일반적 입지 조건에 대한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림 23> 동북권, 동남권 권역NPO지원센터 위치 표시



<표 52> 권역NPO지원센터 입지조건 요약

구 분	내 용
위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치구에서의 거리, 접근성, 현실성(임차료) 등을 고려한 권역의 중심지역에 있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지하철 환승역과 버스정류장 인근으로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 · 동북권NPO지원센터는 지하철 환승역에서 약 200m, 동남권NPO지원센터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2개 센터 모두 도보 3분 이내의 거리임
면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권NPO지원센터의 경우 향후 이전까지 고려하면 각 권역센터 모두 400㎡ 정도의 단독공간을 사용 중 · 서남권의 경우 최소 면적 기준을 400㎡로 하여 7개 자치구 지원이 가능한 현실적인 면적에 대한 고려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NPO지원센터의 경우 오금공원, 가락근린공원, 옷말공원 등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으며 오금동주민센터, 송파경찰서 등의 관공서가 인근에 위치 · 동북권NPO지원센터는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 시설과 노원세무서, 도봉경찰서가 인근에 있고, 플랫폼 창동과 근거리에 위치

VI. 맺음말: 서남권NPO지원센터에 대한 제언

1. 서남권 7개 자치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거점 조성

- 서남권의 경우 서울시의 5개 권역 중 가장 많은 자치구가 소속되어 있기에 권역 네트워크 구성 방안과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함
- 7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지원조직으로서 기능하며 자치구 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서남1권(강서구, 양천구), 서남2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권(관악구, 동작구)으로 구분되는 소권역별 네트워크 추진
- 소권역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비영리 의제와 공통 사업 발굴을 지원하여 탄탄한 시민사회 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협력체계와 소권역별 장단점을 고려한 소권역 간 사업 연계와 협업으로 자치구의 역량을 강화하여 서남권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함

2. NPO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자원연계 협업 플랫폼 구축

- 권역 내 정부 기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자치지원센터 등의 중간 지원조직, 시민사회단체,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사회공헌팀과의 자원연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권역 차원의 조사를 통한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남권 NPO와 자원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권역 내 광역, 전국 규모의 활동단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그들이 축적한 NPO 활동의 경험적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함
-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자원을 연결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유연한 방식으로 NPO 활동 생태계를 확산하는 것이 핵심임

3. 전문성과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수평적·자율적 운영

- 센터와 센터활동가들은 서남권의 욕구에 부합하고 권역을 관통하는 의제 개발 선정, 지역협업, 네트워크 구축, 효율적인 자원 연결, 코디네이팅 등 여러 전문성을 요구받게 될 것임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센터 차원에서 인적 구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
- 또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 권역 내 NPO들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조력자,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센터와 NPO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활동가 간에도 신뢰를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4. 서남권 특성에 따른 NPO 활동 모델 발굴 및 공익활동 촉진

- 7개 자치구로 구성된 서남권의 욕구에 부합하고 권역을 관통하는 NPO 활동 모델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V. 서남권NPO지원센터 운영전략의 라. 서남권 특성화 사업”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논의를 통해 자치구별 특성과 소권역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여 서남권의 NPO 활동 모델을 구체화하고 발굴 과정 자체가 공익활동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5. 시민사회의 행정에 대한 협치 파트너 역할 수행과 권역 의제 발굴

- 지역 내 NPO 및 여러 시민사회 주체들이 협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의 공동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각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활동가나 NPO 단체가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행정의 협치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권역 내 NPO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NPO 생태계와 시민사회의 발전,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

참고문헌

- 김소연·김문주·조철민. 2018. 한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연구. 시민정치포럼 연구보고서
- 김지현. 2016. 중간지원조직과 거버넌스. 희망제작소 희망이슈 5호.
- 김태영. 2016. 사회적경제 영역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분석. 정부학연구 제22권 제2호.
- 박세훈. 2015.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특성 연구. 도시행정학보
- 변미리. 2019. 통계로 보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서울연구원
- 서울NPO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2019. 서남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서울NPO지원센터·NPO스쿨. 2019. 동남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 서울NPO지원센터·한신대학교 평화와공공성센터. 2017. 동남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 서울시NPO지원센터·서울연구원. 2018.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제언: 시민사회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
- 서울연구원. 2013.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자치구 및 용역사 설명회 자료
- 서울특별시. 2018. 2030 서울생활권계획.
-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과제
- 안현찬·구아영.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정병순·김지유. 2016. 지역사회 기반 지역협치 모델 정립방안. 서울연구원
- 정병순·황원실. 2018.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서울연구원
- 조철민. 2015.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시민사회의 지형. 공간과 사회
- 조철민. 2015.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지향. NGO 연구 10권 2호

- 조철민. 2016. 서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CSOs)의 상태와 중간지원 조직의 지원활동. 신학과 사회 30(1)
- 주성수. 2018.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한양대학교출판부
- 주성수 · 이영재. 2012. 시민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지원방안 연구. 특임 장관실 연구용역보고서
- 특임장관실 시민사회발전자문위원회. 2012. 민관협력과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2020년

서남권NPO지원센터 설립타당성 및 운영전략 연구

발행일 2020년 7월 31일(SNPO 2020-B-002)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